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9



무역장벽 보고서 1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요약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하여 USMCA 개정,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9년 보고서는 98개국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제1권 무역장벽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정보를 발굴하고, 기존 무역·투자 장벽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TPP 탈퇴, 미·중 무역분쟁, USMCA 체결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타결하였으며, 태양광제품·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2019년에는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와 풍력타워, PET 시트,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를 2018~19년 동안 다섯 차례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2019년 10월 미·중 통상협상이 1단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2018년 타결된 USMCA는 미국 하원의 비준 반대로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통상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EU는 TBT와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무역장벽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침(Directive 2019/904)이 확정되어 2021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해 검토가 시작되는 등 환경 분야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GDPR)의 발효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GDPR의 99개 조문 중 69개 조문이 오픈닝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 권한도 회원국의 감독 기관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내용과 집행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2019년 EU도 공동체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EU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2019년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여 전략물자나 우려용도 사용 위험이 있는 비전략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

요약

SUMMARY

하였다. 또한 일본은 2019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2017년 제정) 보완,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나 투명성 결여 문제 방지 등 디지털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제반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개정, 2020년 시행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조치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중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석유화학제품 2건(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과거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19년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도 대상(신에너지 자동차 목록)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서·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흡하다. 중국은 2018년부터 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여 투자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자유무역시범구는 별도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특별관리조치를 시행하여 더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국내에 휴대폰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더해 2019년에는 수입 휴대폰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자국 산업 보호 및 소비자 수입 억제에 위해 선납 소득세를 인상하였고, 2019년 한국과 관련된 3건(증발기, 식물, 과당시럽)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보호주의적

조치가 많이 시행되었다. 한편 일부 수입금지·제한승인(LARTAS) 품목에 대해 통관이후 확인제가 도입되면서 통관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보세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탁송화물의 통관제도 개선 등도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완성차 수입 규제 실시, 까다로운 중고 기계 수입규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상이한 HS코드 적용, 비효율적 통관절차 운영,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 등 우리 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산 제품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가 많이 시행되는 등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등 강화된 규제를 따라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까다로운 자동차 수입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차량 특소세 환급에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반영하는 등 완성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반덤핑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위가 요구된다.

태국은 국내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한국 수출품과 관련하여 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5건 모두 철강금속 제품이며, 2019년에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태국에는 TBT 관련 비관세조치가 많아 관련 수출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약

SUMMARY

인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2019년 6월 기준 313건)로, 한국 수출품과 관련해서도 반덤핑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019년 말 기준, 시행 중 20건, 조사 개시 5건). 특히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는 특히 화학제품과 철강금속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도는 2019년에 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한편, 인도는 2019년에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과 단일브랜드 소매업, 디지털 뉴스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선도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상이한 HS코드 적용, 부적절한 관행, 복잡한 절차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조달 제한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EAC 인증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송·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호주는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총 5건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최근 호주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라 한·호주 FTA 수준 이상의 양허 확대와 조건 완화 등이 기대된다.

브라질은 통관 지연, 국제표준 불인정, 반덤핑 조치, 제품 강제인증, 현지 직원 고용 의무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자동통관 확대,

단일수입신고 도입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각종 수입규제와 교역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MERCOSUR FTA가 체결되면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가공식품 라벨링, HACCP 인증 등 식품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 발효된 식품안전법에 따라 면허 발급, 이력추적관리, 위생 감독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철강·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2019년 신규로 관세가 부과된 냉연강재, 내부식강판을 포함해 총 12건의 반덤핑 조치가 시행 중이다.

2019년 12월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무역장벽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CONTENTS

2019 외국의 통상환경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미 국 3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유럽연합(EU) 22
PART. III	아시아·대양주	일 본 43
PART. IV	아메리카	중 국 54
PART. V	유럽	인도네시아 81
PART. VI	아프리카·중동	베트남 95
		말레이시아 122
		태 국 131
		인 도 139
		러시아 157
		호 주 164
		브라질 168
		캐나다 179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9



PART I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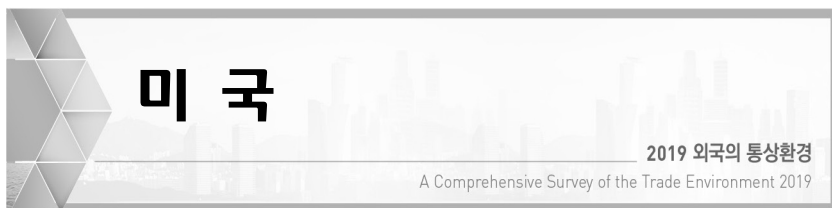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미국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1,316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 수출은 727.2억 달러, 수입은 588.7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13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¹⁾은 자동차(20.6%), 자동차부품(8.6%), 반도체(7.9%), 석유제품(6.2%), 무선통신기기(6.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4.1%), 반도체(6.1%), 항공기·부품(5.6%), 반도체제조용장비(5.5%), LPG(4.8%) 등으로 최근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162.6억 달러와 305.8억 달러, 서비스 무역수지는 143.2억 달러 적자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주요 수출 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37.1%), 운송(28.8%), 여행(10.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8.6%), 기타서비스(6.6%)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 서비스(32.4%), 여행(22.9%), 지재산사용료(17.6%), 운송(15.9%) 등이다.

1962~2019년9월 미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67.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이다. 최근 5년(2015~2019년9월)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총 97.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통신(34.3%), 운송용기계(17.9%), 금융·보험(11.5%), 도·소매유통(9.6%) 등이다. 반대로 1968~2019년 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15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3.2%(1위)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1)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입 품목은 모두 MTI 3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총 464.8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28.2%), 도매 및 소매업(22.3%), 부동산업(19.7%), 제조업(14.8%), 정보통신(5.2%) 등으로, 특히 2019년 들어서는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²⁾

한국과 미국의 FTA는 2007년 4월 타결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되면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편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1~3월 세 차례에 걸쳐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2018년 12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 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1월 WTO TBT 위원회 개최 당시 양자협의를 통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star) 보다 과도한 동작모드 시 최저

2)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투자액(억 달러): ('17년) 10.9, ('18년) 14.8, ('19.9월) 36.6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3년 10월 양자회의에서 에너지스타와 환경보호국(EPA)의 에너지효율제도간의 불일치는 각 규제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방법을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향후 규제 당국간의 조율을 통해 부합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12일에는 동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기업의 규제준수가 의무화되었다. 현재까지는 동 규정에 대해 기업 애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기준의 시행 이후에도 무역장벽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LED 램프 성능 규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총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시험 샘플 장착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시켰으며,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제품의 파생모델 수명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시간 6배 수명 표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수명시간 시험방법은 기존 에너지스타 규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 규제최종안 공표 전에 수명시험이 가능하므로, 시행시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 되었다.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낙뢰 보호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표준(NFPA 780)이 국제 표준과 달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NFPA 780은 민간 협회인 미국화재방지협회가 재래식 피뢰침(Franklin Rod)에 기반한 LPS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표준이며,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등에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표준 하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LPS가 NFPA 780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과 미국화재방지협회에 LPS 국제표준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화재방지협회는 2020년 개정되는 NFPA780에 우리기업의 낙뢰보호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본격 시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법안(제정법)에 서명한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총 7개의 하위규정(규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이 7개 규정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해외공급자 검증제도,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변질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이다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FSMA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식품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 운반, 수입 등과 농산물 재배 및 처리와 관련된 거의 대다수 회사나 업체들이 FSMA에 따른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미국 식품수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DA는 FSMA 이행을 통해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공중보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투자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이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 기술의 정의를 기존(국방 및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에서 확대하여 새롭게 부상(emerging) 및 근본적(fundamental)인 기술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서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논의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투자제제는 중국이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대미 M&A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도 CFIUS의 권한 강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또한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 규제

29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8년 9월 17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대상이던 2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에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³⁾

3)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mpass.or.kr/>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WTO 출범 이후 1995년~2019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616건) 및 반덤핑 조치 부과(443건)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1위 중국) 반덤핑 조사(43건)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9년 12월 기준 총 27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철강금속제품군(21건)과 섬유제품(3건)을 중심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미국은 2015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14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최근 반덤핑 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9년 12월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금속제품 2건(풍력타워, 단조강 부품), 플라스틱·고무제품 1건(PET 시트), 화학제품 1건(아세트)이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체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

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제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판정에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⁴⁾(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⁵⁾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조기업에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의 혐의⁶⁾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조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⁷⁾ 2019년 11월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수입제한조치(National security import restriction)는 안보상의 이유로 셰이프가드와 유사한 형태의 수입제한조치를

4)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5)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6) 제조자는 특정시장상황의 근거로 첫째, 저가의 중국산 열연(HRC)이 한국에 공급되어 OCTG의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 왜곡되었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국내 열연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셋째, 한국 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로 열연의 가격이 왜곡되었으며, 넷째,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들었다. 이효영(2017), p. 17; 법무법인 광장(2017), pp. 77-78 참고.

7) 이효영(2017), p. 17; 외교부(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27 참고.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후 일부 국가들과는 협의를 통해 조치 대상에서 면제시키거나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었으나(한국은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 쿼터), EU 등과는 마찰이 계속되면서 2018년 6월부터 관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8년 5월부터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⁸⁾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⁹⁾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 2019년 7월 이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정을 불이행

8)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9)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이 피해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WTO가 중재에 나섰다.

한편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¹⁰⁾ 조사에서 제로잉¹¹⁾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2016년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2017년 12월 26일까지)이 지났음에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2017년 1월)를 결정하였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95건), 상계관세를 부과한(111건) 나라이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7건) 및 부과건수(37건)와 비교해도 미국은 모두 2배가 넘는다. 최근 미국은 상계관세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이래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탄소합금후판 등 4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이 있었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10)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이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 업계가 상계관세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은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시켰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된 것은 2002년 철강에 대한 조치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쿼터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세탁기 관련 우리나라 기업(LG, 삼성)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예비판정 이후 생산공장을 베트남,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세탁기/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결과

	기존 관세율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1% (0.3%)	저율관세	20%	18%	16%	-
		쿼터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
		초과시	50%	45%	40%	-
대형 가정용 세탁기 부품	2.6% (0.7%)	저율관세	0%	0%	0%	-
		쿼터	5만 개	7만 개	9만 개	-
		초과시	50%	45%	40%	-
태양광 셀	0%	저율관세	0%	0%	0%	0%
		쿼터	2.5GW	2.5GW	2.5GW	2.5GW
		초과시	30%	25%	20%	15%
태양광 모듈	0%	-	30%	25%	20%	15%

주: () 안의 세율은 한·미 FTA 관세양허에 따른 2018년도 미국의 대한민국 관세율.

자료: 배찬권 외(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p. 3

원산지 규정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거쳐 2018년 9월 30일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최종 합의하였다.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특혜를 받기위한 역내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미지역의 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가치비율’을 도입하여 자동차 일부 부품을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30~40%)이상이어야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산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USMCA 역내로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규정에서 명시한 RVC 적용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연간생산량의 1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232조 적용에 대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기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TRQ 형태로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기업들이 기간 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¹²⁾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에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미 한·미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른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재검사 하는 등 과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달

인프라 조달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

미국의 연방조달은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주정부의 조달은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주별로 관련 법령 또한 상이하다.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의 조달법에서는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산 우선구매정책

12)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이다.

(Buy American)¹³⁾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원천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Buy American (1933)¹⁴⁾은 연방기관 조달에, Buy America(1982)¹⁵⁾는 주·지방 정부의 조달 중 연방정부 자금이 투여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그 밖에도 통상협정법 (TAA: Trade Agreement Act, 1979), Berry Amendment(1941), 지방 정부나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카 등 법률로 명시된 규정만 38개 이상 존재한다.¹⁶⁾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WTO-GPA와 FTA가 미국내 바이 아메리카 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바이 아메리카의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상정되고 있으며,¹⁷⁾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이 아메리카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특히,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바이 아메리카를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58, Jan. 31, 2019)이 발동되어 향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파이프 라인, 통신망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⁹⁾

13)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정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제품이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근에는 특정법을 지칭하기 보다는 미국의 자국산 구매 원칙을 포함하는 모든 규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4) 1933년 대공황 당시 미국산 제품의 구매 증대, 고용 증대, 국내 제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5) 연방교통지원법(STAA: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의 일부(Section 165)로 1982년 입법되었다.

16) 박혜리(2018), 'Buy National' 정책의 확산과 최근 정부조달의 국제 논 의 동향*, KIEP 기초자료 18-12 P.4 참고.

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9.12) 참고.

18) Monitoring Consult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61%가 찬성, 2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 CNBC(2018.8.15.), "Trump is preparing to expand 'Buy America' rules to include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s" 참고.

미·중 무역분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를 시행하였다.

▶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날짜	美 → 中 관세부과	中 → 美 관세부과
1차	2018.7.6.	340억 달러 (818개 품목, 25%p)	340억 달러 (545개 품목, 25%p)
2차	2018.8.23.	160억 달러 (279개 품목, 25%p)	160억 달러 (333개 품목, 25%p)
3차	2018.9.24.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
4차	2019.6.1.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p→25%p)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5~10%p→5~25%p)
5차	-	약3,000억 달러 (3,792개 품목)	750억 달러
	2019.9.1.	1,120억 달러 (15%p)	1,717개 품목 (5~10%p)
	2019.12.15.	1,600억 달러 (15%p)	1,815개 품목 (5~10%p)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 2019년 24호를 이용하여 저자수정.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통상 분쟁의 완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미·중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고 제13차 협상(2019년 10월 10일)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0년 1월 15일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 합의문²⁰⁾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20)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대중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추가관세 계획을 철회하였다.

▶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권: 기업비밀 절도에 대한 처벌 확대, 모조품 단속 강화, 사업 집행 강화,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 제한 ◦ 기술이전: 시장 진출, 인허가 조건으로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농수산물: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및 수입 상품 범위 확대 ◦ 금융서비스: 증권/보험 등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자본 보유제한 철폐 ◦ 환율정책: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억제, 거시경제/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에너지 서비스 구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19.12.15 예정) 철회 ◦ 기존 1,100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 (2.14~)(단, 2,500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부과하던 25%는 유지)

자료: 이원석 외(2020.1.16.),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평가', 통상이슈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상호 관세부과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1단계 합의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그러나 향후 협정 이행 여부 및 세부 사안에 대해서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9.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1~4차, 2,5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6,842	2,715	100.0	587	100.0
기계류	625	579	21.3	136	23.1
전기·전자제품	361	405	14.9	40	6.9
생활용품	77	348	12.8	2	0.3
휴대폰 및 부품	2	245	9.0	4	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511	222	8.2	45	7.7
자동차, 자동차부품	185	171	6.3	189	32.1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34	128	4.7	14	2.5
화학공업제품	1,279	83	3.1	23	4.0
비금속제품	167	77	2.9	8	1.4
목재 및 종이류	490	73	2.7	6	1.1
의료, 정밀광학기기	216	63	2.3	9	1.6
유리 및 도자제품	226	62	2.3	3	0.5
가전	74	58	2.2	13	2.1
반도체	17	47	1.7	30	5.2
섬유·의복·가죽제품	917	42	1.6	10	1.8
농수산물	993	61	2.3	7	1.2
화장품	25	14	0.5	6	1.0
신발 및 모자류	28	14	0.5	0.1	0.0
석유제품	62	6	0.2	33	5.6
항공기 및 부품	16	6	0.2	7	1.3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 2019년 24호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및 수입액(5차, 3,000억 달러 상당)

(단위: 개, 억 달러)

품목	품목수	대중국 수입액(2018)		대한국 수입액(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재품목 전체	3,792	2,729	100.0	125	100.0
기계류	143	558	20.4	5	4.3
휴대폰 및 부품	5	483	17.7	44	35.1
섬유·의복·가죽제품	763	380	14.0	3	2.2
생활용품	89	308	11.3	4	3.5
전기·전자제품	96	240	8.8	18	14.5
신발 및 모자류	169	175	6.4	1	0.8
가전	58	138	5.1	8	6.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89	107	3.9	3	2.3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373	60	2.2	28	22.8
잡품 및 수집품	110	38	1.4	2	1.4
목재 및 종이류	58	38	1.4	1	0.8
의료, 정밀광학기기	53	33	1.2	1	1.8
화학공업제품	160	31	1.1	0.4	0.4
귀금속	57	31	1.1	1	0.6
비금속제품	66	30	1.1	1	0.1
유리 및 도자제품	91	28	1.0	0.2	0.2
농수산물	1,131	19	0.7	2	1.8
자동차, 자동차부품	13	7	0.3	0.3	0.3
시계류	157	6	0.2	0.007	0.0
악기류	41	6	0.2	0.4	0.3
철도 및 부품	1	5	0.2	0.03	0.0

주: 미국의 대중 수입액 5억 달러 미만 품목군은 제외

자료: 문병기 외, 2019,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FOCUS」, 2019년 24호

USMCA 개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말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USMCA 개정의정서 및 이행법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규칙을 도입하는 등 집행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규범 및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멕시코에 한정)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및 미국 의회로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의 규정이 마련되는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독점,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권 인정 및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추가 3년간의 정보 독점 보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약품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 철강의 70% 이상이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역내산 철강 수요의 진작을 도모하였다.

USMCA 개정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수용하고 노동과 환경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SMCA 개정의정서와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유럽연합(EU)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EU는 전세계 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²¹⁾ 한국의 대EU 상품 무역은 2002~08년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에 따라 수출은 정체,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2015년(1,053억 달러), 2016년(985억 달러) 연이어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면서 2018년 1,120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은 576.8억 달러, 수입은 623.0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16.0%), 자동차부품(7.9%), 선박해양구조물·부품(5.4%), 합성수지(5.1%), 건전지·축전지(5.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13.7%), 농약·의약품(6.2%), 반도체제조용 장비(4.0%), 원동기·펌프(3.4%), 신변잡화(3.2%) 등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18년 한국의 대EU 수출은 112.5억 달러, 수입은 248.2억 달러로 13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 사업서비스(36.5%), 운송(26.1%), 기타서비스(13.0%)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31.4%), 여행(25.3%), 운송(21.8%) 등이다.

1962~2019년 9월 누적금액 기준 EU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는 937.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0.9%(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EU의 대한국 투자는 총 238.1억 달러로 주요 투자국은 몰타(33.6%), 네덜란드(24.9%), 영국(13.3%), 스페인(6.6%), 독일

21)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한다.

(6.0%) 등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7.9%), 화공(21.2%), 도·소매 유통(12.9%), 전기·전자(5.4%) 등이다. 반대로 1968~2019년 9월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0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누적금액에서 14.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EU 투자는 총 296.6억 달러로 주요 투자대상국은 룩셈부르크(25.7%), 영국(23.2%), 프랑스(10.5%), 네덜란드(6.9%), 아일랜드(6.8%) 아일랜드(11.3%), 네덜란드(10.1%), 프랑스(6.9%) 등이고,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32.9%), 부동산업(23.3%), 제조업(21.9%), 도매·소매업(6.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EU측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적권 행사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도 발효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법률 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V·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준

EU는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WTO TBT에 2016년 12월 통보한 이후, 수렴된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2018년 10월 WTO TBT에 재통보한 상황이다.

2018년 10월에 통보된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시기 유예확정, 정보 보관기간(15년) 삭제 등 그간 우리정부와 업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EU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 11월 우리정부(산업부 국표원)는 EU 집행위와 한-EU FTA 전기 전자대화체 회의를 통해 우리측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1단계 시행 후 규제적정성 검토 이후 다음 단계 도입시기 결정,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규제 도입 시기 완화, △타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삭제, △자동전원차단 전환시간 확대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였다.

향후에도 우리정부는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각종 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동 기술 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 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하고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혹은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폐기물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²²⁾

22)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know.do?pageNum=1&subNum=1&command=view&idx=6F9B8>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제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 (「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개정지침은 기존 EEE 10가지 제품군에서 제외되었던 의료 장비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가 포함되었고,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었다. 동 지침의 규제 대상자는 최종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라벨 기준 강화

1992년 처음 도입된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조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으로,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2009/563/EG」보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공표함에 따라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A6A-7841-48DF-BDA1-20F225D5DA31 (2016.1.14 방문)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신발의 경우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와 생산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 및 근로조건 상응여부를 중점으로 포함하였고, 가구의 경우 위해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컴퓨터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기준 강화,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여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발 및 컴퓨터 등의 제조사는 EU 에코라벨 인증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라벨의 인증획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1개국(28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 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²³⁾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23) 2012.11월 EU가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하였다.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그렇지만 2016년 10월 ICAO 총회에서 국제시장기반조치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집행위는 2017년 2월에 역내공항과 역외 공항간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유보를 2017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7년 12월 EU 의회와 EU이사회는 EU역내와 EU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²⁴⁾. 이에 따라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 I)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지침이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업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4) EU의회는 2017년 12월12일 동 지침개정안을 표결로 채택하였고, EU 이사회는 2017년 12월13일 동 지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으로 개정되었는데, 중량 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가 강화되었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 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되었으며,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Directive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10월부터,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부담금을 부과(소매점에서 유상 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체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과 효율적 소비, 폐기물 발생저감 과 친환경적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와 이차자원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 모니터 등 주요 품목별 eco-design directive를 개정,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공정별 최적가용지침서(BAT)를 개정·개발,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주요 교체부품의 의무보존기한을 설정하고 해체 및 수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EU 공동의 품질기준 마련 등을 밝히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는 순환경제패키지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제품규제 강화 및 변화 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EU시장내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유럽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²⁵⁾

2018년 5월 EU 집행위는 해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음료교반기, 풍선막대, 과자·사탕 봉투 등)과 어구용품(fishing gear)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 시장 출시 금지, 시장출시 제한, 회원국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동 제품의 소비를 저감시키는 목표의 설정, 판매 시 대체품 제공, 생산자의 책임 제고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제정안을 제안하였다²⁶⁾.

그 후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는 동 지침의 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8년 12월,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플라스틱 식기류·접시·빨대·면봉용 막대, 발포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음식물 용기·음료 용기·음료용 컵,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회원국의 상당 수준의 소비저감 조치(플라스틱 음식물 용기·음료 컵), △생산자책임강화²⁷⁾(플라스틱 함유 담배필터 제조업자), △표시 의무²⁸⁾(물티슈, 담배, 플라스틱이

25) EU 집행위 보도자료(2018. 1. 16.), "Plastic Waste: a European strategy to protect the planet, defend our citizens and empower our industries" 참고.

26) EU 집행위 보도자료(2018. 5. 28.), "Single-use plastics: New EU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참고.

27)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물이 된 경우, 동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공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28) 해당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이 제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릴 경우, 환경에 위해를 준다는 내용을 표시할 의무

함유된 필터가 있는 담배제품)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9) 동 지침(Directive 2019/904)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었고³⁰⁾, 2021년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EU회원국들은 동 지침의 내용을 각국의 국내법령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EU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데, EU집행위원회가 2018년 1월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면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게 EU차원의 미세플라스틱 규제³¹⁾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유럽화학물질청은 2019년 1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³²⁾ 동 보고서에는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REACH의 틀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시장출시 제한, △라벨링 의무, △보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³³⁾, 미세플라스틱의 대체재를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시장출시금지라는 규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2019년 9월말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0년 3월경 동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29)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18.12.19.), “Single-use plastics: Commission welcomes ambitious agreement on new rules to reduce marine litter” 및 EU 각료이사회 보도자료(2018.12.19) “Single-use plastics: Presidency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with Parliament”

30) EU 각료이사회 보도자료(2019.5.21.) “Council adopts ban on single-use plastics” 참고

31) 영국이 2018년 1월부터 행궁용 개인위생제품(rinse-off personal care product) 제조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6월부터는 이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탈리아가 2020년부터 행궁용 화장품(rinse-off cosmetic product)과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세제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일부 EU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32) 유럽화학물질청 보도자료(2019.1.30.) “ECHA proposes to restrict intentionally-added micro-plastics” 참고

33) 동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폴리머(polymer)를 포함하는 고형입자로 구성된 물질로서, 크기가 5mm 이하(섬유질인 경우 크기가 15mm 이하)인 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기준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 (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 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7년 5월 동 협약을 비준했다. EU는 국제 수은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배터리·축전기,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 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2019년 7월 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1월 1일까지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은오염 지점을 목록화(inventory)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하였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화장터(crematoria)에서의 수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 여부를 검토하며,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³⁴⁾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고, 5,445건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34) 1차 등록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0년.11.30까지

2차 등록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3년.5.31까지

3차 등록 (연간 1~10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등록): 2018년.5.31까지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한다.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이었으며, EU 국가별 등록률은 독일 25%, 영국 14%, 프랑스 10%이다.³⁵⁾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EU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직접적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가 나노물질등록부(registry)를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 판매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나노물질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규제 조치

EU의 수입규제 현황

EU는 2019년 12월 기준 총 136건(반덤핑조치 119건, 상계조치 17건)의 무역규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그 중 5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이다. 한편 2019년 신규로 부과된 반덤핑조치는 1건, 상계조치는 2건이며,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조치는 5건, 상계조치는 3건이다.

1995년 이래 EU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가 집중되어 있다. 2019년 12월 현재 EU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 조치 5건 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모가 큰 주요국

35)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발표 자료(2018. 6. 1.) "Chemicals on EU market now registered" 참고.

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특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측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발효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발효되었다. EU는 개정된 반덤핑 규칙(2017/2321)을 통해 기존의 무역구제관련 법(반덤핑규칙 2016/103654) 및 상계관세 규칙(2016/103755) 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반덤핑 부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EU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왜곡은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 생산가 및 판매가, 국제가격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⁶⁾

본 개정안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규정의 종료에 따른 EU의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바,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의 왜곡 등의 이유로 PMS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방위적인 보호 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는 2017년 12월 중국 대상 첫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중국산 유기코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재심 검토 시, 중국 시장 내 중대한 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치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9년 12월 기준,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6건(철강 셰이프가드 잠정조치 포함)이며, 2019년에 들어 1건(중량 감열지)의

36)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P.24 참고.

반덤핑 조가가 개시되었다. 특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1) 철강 세이프가드

2018년 3월 26일 EU 집행위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미국향 철강제품의 대EU 전환효과에 따른 역내 철강산업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28개 철강재 품목(최초 26개 품목에서 2개 품목 추가)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직권 개시하였다. 이후 집행위는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있다고 확인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 방식, 2018.7.19부터 총 200일)를 부과하였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조사가 WTO 협정상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조치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한-EU 정상회담(2018.10.19), FTA 이행위원회, 공청회(2018.9.12) 등을 계기로 적극 개진해 나가고 있다. 최종결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2018.12.15)까지이나, 필요시 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2)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2016년 2월 18일 EU 집행위는 유럽 감열지 협회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경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집행위는 2016년 11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최종 판정에서 EU 집행위는 덤핑마진 계산 방식 오류 등에 대한 우리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반덤핑 관세를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지 않고 1톤당 104.46유로(반덤핑 관세 환산시 10.3% 수준)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확정 반덤핑 조치는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지만 종료 재심(expiry review)을 통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5년의 조치 부과기간 중이라도 동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해 관계자의 요청 또는 집행위 및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중간 재심(interim review)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방향성 전기강판(GOES)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철강제 관련결구류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후 EU 집행위는 2018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한 상황이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6년 이상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조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라도 조치 종료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 기타

품목명	품목	유형	조사 개시일 (원심)	원심 판정일	최종 조치내용			총 기간 (원심판정 연도기준)
					최종 판정일	내용	구분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	철강	AD	'09.08.12.	'10.5.11	'16.07.18.	규제 제외 재심 한국기업은 제외	재심	5년 이상
실리콘메탈 (우회덤핑)	화학	AD	'06.04.20.	'07.1.19.	'10.05.29.	관세부과 49%	1차 재심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EU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감시 리스트 발표

EU집행위는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정책패키지(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³⁷⁾를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Notorious Markets List³⁸⁾'를 벤치마킹한 EU 역외시장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리스트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³⁹⁾)를 발표하였다. 동 리스트는 EU의 기업, 협회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PR 침해가 의심되는 시장 (온/오프라인 마켓) 관련 의견수렴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시행하고, Europol, EUIPO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R 침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보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37)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7/EN/COM-2017-707-F1-EN-MAIN-PART-1.PDF>(검색일:2018.12.21.)

38)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2017-notorious-markets-list>(검색일:2018.12.21.)

39)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검색일:2018.12.21.)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실제 시장 등 4분야로 분류하여 20개 이상의 국가의 52개의 EU역외 웹사이트 및 시장을 감시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동대문 시장이 EU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서비스·투자 장벽

외국인직접투자 스크리닝 제도 도입

최근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U에서도 2016년 중국의 Midea가 독일 로봇제조회사인 Kuka를 인수할 때 유럽 내에서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의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가 독인 반도체 회사인 Aixtron의 인수를 시도했을 때, 독일 정부가 동 투자를 허용했다가 다시 허가를 철회하고 재심사하여 안보상의 이유로 이 거래를 최종적으로 불허한 바 있다. 그동안 EU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별국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 왔으나, 최근 첨단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M&A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EU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⁴⁰⁾를 도입하였다.

EU의 FDI 스크리닝 규정(regulation)은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EU 회원국들의 FDI 스크리닝 체계를 확립하고,

40) 이 규정은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이다. EUR-Lex의 동 문건(<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참고.

EU 회원국들 간 및 EU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스크리닝 대상이 될 수 있다.⁴¹⁾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그 국가는 투자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회원국이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통보 받은 EU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해당 투자가 공동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EU 회원국은 자국의 스크리닝 결과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의 FDI 스크리닝 제도는 EU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되, 투자 유치국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어 동 제도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신보호주의의 확산 속에서 EU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 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이 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EU의 FDI 스크리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FDI 규제가 당초 중국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점차 첨단기술 및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1) 동 규정의 제4조 1에서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특히 (a) 에너지, 운송, 수자원,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우주, 국방, 선거 및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물리적·가상적 중요 인프라와 그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토지 및 부동산과 민감한 시설, (b)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양자 및 핵 기술, 나노 기술, 생명 공학을 포함하는 (EC) No 428/2009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술 및 민수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c) 식량 안보, 에너지, 원자재를 포함한 중요 투입물의 공급, (d) 개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e)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

EU 집행위는 철강분야 글로벌 생산설비 과잉 및 이로 인한 중국산을 비롯한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구제 제도를 현대화하고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0월 간 EU집행위가 신규로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2건 중 10건이 철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EU 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prior Union surveillance of imports of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시행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유럽 경제지역을 제외한 비EU 국가가 EU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U 수입업체들이 EU 회원국 기관에 수입물량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한 정보가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가 2020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국제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제품 교역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철강 수입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로 무역구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밝힌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무역구제조치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토대로 향후 EU 철강 수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국가별, 제품별 수입동향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EU 집행위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월 EU 집행위는 역내 철강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NO.2017/1092)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HS 7318(스크루와 볼트 등) 품목은 0.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였고, HS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 품목은 삭제되었으며, HS 7229(기타 합금강의 선)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신규로 포함된 HS 7229 품목은 2016년 EU 수입에서 대한민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4%(제2위)에 이르고 있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 제도의 주된 관리 대상 제품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기에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철강제품의 EU 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EU와의 양자 회의시 동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

EU GDPR 발효

2018년 5월 25일 EU는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에 더하여, EU 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역외 기업의 경우 EU 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GDPR에서는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IP 주소, 쿠키, RFID 등이 온라인 식별자에 포함되며, ‘잊혀질 권리(삭제권, right to be forgotten)’, ‘처리 제한권’, ‘정보이전권’ 등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GDPR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컨트롤러(Controller)’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의무,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 기구협조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Processor)’는 △적절한 문서화 의무, △적절한

보안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국외전송 기준, △국가 감독기구협조 의무 등을 부담한다. 기존의 EU 지침(Directive 95/46/EC)에서는 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조사권, 실효적인 중재권, 법적 쟁송참가권만을 규정했으나, GDPR은 컨트롤러에 대한 규칙위반 시정명령권 등 강력하고 폭넓은 감독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복수의 EU 회원국에 주재하는 컨트롤러를 위하여 One-Stop Shop 개념을 도입하여 주 사업장의 감독기관을 총괄감독 기관(lead supervisory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GDPR에서는 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GDPR 입법의 전 과정을 담당했던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은 GDPR의 발효와 함께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로 대체되었으며, 유럽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자문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GDPR의 99개 조문 중 약 69개 조문이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자유재량을 위임하는 형식의 오프닝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결정 권한이 회원국 감독기관에게 있으며, 2019년 1월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CNIL)가 구글에 대해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고액 과징금 부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동향 또한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1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증가세로 반전, 2018년에는 85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한국의 대일본 상품 수출입은 305.3억 달러와 546.0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40.8억 달러 적자이다. 2019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5.0%), 철강판(7.7%), 정밀화학연료(3.9%), 반도체(3.6%), 자동차부품(2.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9.1%), 반도체제조용장비(7.1%), 철강판(5.0%), 플라스틱제품(4.7%), 기초유분(3.5%) 등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비스 무역은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2012년 130.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2018년 8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의 경우 2008년 106.2억 달러, 2016년 93.5억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반등하면서 2018년 11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1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8년에는 3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업종은 운송(34.7%), 기타사업서비스(31.2%), 여행(19.0%)이며, 주요 수입업종 역시 여행(46.4%), 기타사업서비스(23.1%), 운송(19.0%) 등이다.

1962~2019년 9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4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의 15.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총 52.7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18.2%), 화공(12.3%), 전기·전자(11.7%), 도·소매유통(9.4%), 정보통신(8.4%) 등이다. 반대로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1968~2019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99.2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일본 투자금액은 41.7억 달러로 주요 투자업종은 부동산업(26.5%), 금융·보험업(21.8%), 제조업(18.0%), 정보통신업(13.6%), 도매·소매업(7.6%) 등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게다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 시행 등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무역관계 진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이 2019년 11월 잠정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공식협상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김 등 10개 품목)와 ②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김은 2005년에 對한국 쿼터만 운용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쿼터와 함께 對한국쿼터를 운용하는 할당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할당방식은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을 포함한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이트국가 제외 및 개별허가 전환

일본은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으로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기존 포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상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었고, 비전략물자 수출은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품목⁴²⁾이 우려용도(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로 사용될 위험이 있을 시 개별허가를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재료 및 중간재 관련 다수의 품목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그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절차



자료: 전략물자관리원(KOSTI), 일본규제 바로알기,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30L.do?CURRENT_MENU_CODE=MENU0010&TOP_MENU_CODE=MENU0002

42) HS코드 기준으로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가 대상(식료품, 목재등 제외)

반덤핑 조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6년 8월부터 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8년 3월 반덤핑 관세 부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일본의 수산화칼륨(KHS 2815.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본 칼리전해 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9일 최종판정 결과에 따른 49.5%의 반덤핑관세(중국산의 반덤핑 관세는 73.7%)가 5년 동안 부과될 예정이다.

2017년 3월 31일 일본은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HS 7307.93)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일본밴드주식회사, 주식회사벤칸기공, 후루바야시공업주식회사 등 3개사가 2015년 10월~2016년 9월 사이 한국산 및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어 일본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반덤핑 예비판정(태광 43.21%, 기타 한국 업체 73.51%, 중국 업체 60.84%)이 내려졌고, 2017년 12월 27일 잠정관세 통보(태광 41.8%, 기타 69.2%)가 있었으며, 2018년 3월 30일 잠정관세 통보 때와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2023년 3월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 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공고

일본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감시 지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육류제품, 수산물 등 수출국의 위생관리가 중요시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 확인을 강화 ②모니터링 검사시 병원성 미생물 검사, PLS제도에 근거한 잔류농약 검사, 냉동수산물가공식품의 성분 규격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 ③수입자에 대해 수입전 지도를 통해 제조공정, 원재료 등의 변경이 없는지 실제 수입품과의 동일성 확인을 강화 등이 있다.

일본 검역소에서는 동일한 식품에서 복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회 수입시마다 명령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수입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국의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① ID등록업체 검사면제 품목: 돈육, 장어, 양식광어 및 가공품, 청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참외
- ② 원산지증명서 첨부시 면제품목: 이매패류
- ③ 지정 업체 검사조건: 양식광어 및 가공품, 피조개, 키조개, 김치의 경우 과거 위반사례로 인한 해당업체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53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7년 10월까지 43종을 인정하였지만

10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4개 품목(장어가공품, 가쓰오부시,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이다. 추가적으로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는 원료 함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후생노동성은 일본내 식품기업에 대해 HACCP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관리 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며(2021년 10월까지 유예기간), 향후 일정범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HACCP 시스템에 근거한 위생관리를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2019년 10월 일본 재무부는 일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구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투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⁴³⁾

개정된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포트폴리오 투자 등과 같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단, 비공개 기술 및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 것 등을 전제로 하며, 외국 정부 등의 영향을 받는 자 및 지정업종 중 국가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특히 큰 것은 대상에서 제외)는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사후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기존 10% 이상 취득할 때만 사전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두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 이상 취득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되었다.⁴⁴⁾ 사전신고 대상 업종은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군사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조업, 사이버보안 관련, 전기·가스, 열 공급, 통신, 방송, 수도, 철도, 여객운송,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 석유, 가축관련, 항공운송, 해운은 물론 정보처리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신

43) 일본 재무부(2019.10.18.),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20191018.html 참고.

44)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자료(2019.11.8.) “[경제] 외국자본 출자규제 위한 외환법 개정 관련” 참고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65/view.do?seq=1344699&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amp%3Bpage=6)

및 IT서비스까지 포함된다.⁴⁵⁾ 일본의 개정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들이 대일본 투자를 통해 일본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개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심의 과정은 물론 적용 사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⁴⁶⁾ 동 조치의 기본 원칙은 ①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법적 평가의 시점, ②플랫폼·비즈니스의 적절한 발전 촉진, ③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실현, ④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 ⑤데이터 이전 및 개방 규칙 검토, ⑥균형있고 유연하며 실효적인 규칙 구축, ⑦국제적인 법 적용 방식과 조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⁴⁷⁾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는 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⁴⁸⁾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조치를 발표·시행하였다.⁴⁹⁾

45) 세부 사항은 전거서 내의 “關連政省令・告示改正案の關係資料を掲載いたしました” 내용 참고.

46) 일본 경제산업성(2018.12.18.), “プラットフォーム型ビジネスの台頭に対応したルール整備の基本原則を策定しました” 참고. <https://www.meti.go.jp/press/2018/12/20181218003/20181218003.html>

47) 일본 공정거래위원회(2019.1.23.),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に関する取引実態や利用状況についての情報提供窓口の設置について” 참고.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an/190123_1.html

48) 일본 공정거래위원회(2019.8.29.),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案)」に対する意見募集について” 참고.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aug/190829_dpfpcc.html

4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2019.12.17.),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

한편, 2019년 11월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거래 투명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독과점 방지 등 디지털 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의 권리 이익 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강령을 발표하였다.⁵⁰⁾

이처럼 일본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2017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하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나 투명성 결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또한 일본은 향후에도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자격증은

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の公表について” 참고.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dec/191217_dpfgl.html

50)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9.12.13.), “「個人情報保護法 いわゆる3年ごと見直し 制度改正大綱」の公表及び同大綱に対する意見募集” 참고. <https://www.ppc.go.jp/news/press/2019/20191213/>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등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일반도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이 허용되면 운송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활어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등 양국 간 활어 운반과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 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전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전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약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 국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무역의 약 2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1,621억 달러, 수입은 1,065억 달러, 상품 무역수지는 556.4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반도체 단가 하락과 더불어 세계적인 교역 부진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2019년1~9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8.1%), 평판 디스플레이·센서(7.0%), 석유제품(5.5%), 합성수지(5.1%), 석유화학중간 원료(4.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7.8%), 컴퓨터(6.3%), 정밀 화학연료(5.1%), 무선통신기기(4.8%), 산업용전기기기(3.6%) 등이다.

서비스 무역은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210.2억 달러, 수입 18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업종은 여행(41.9%), 운송(27.6%), 지식재산권 사용료(12.4%)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가공서비스(38.6%), 운송(20.6%), 여행(17.7%) 등이다.

1962~2019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3.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8%를 차지해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중국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33.8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52.7%), 기계장비·의료정밀(10.8%), 부동산(10.5%), 도·소매유통(8.5%) 등이다. 반대로 1968~2019년 9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696.7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14.0%(3위)에 달한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191.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78.3%)으로 이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금속 등이 주요 세부 업종이다. 이 외에 서비스업에서는 도매·소매업(5.2%), 금융·보험업(4.2%)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한·중 FTA 제1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최되었고 2019년 11월까지 제6차 협상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을 포함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다. 동 협상은 2012년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이 이루어졌고,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2019년 기준 557개 품목을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지방 상무부서나 상무부에서 발급받는데, 베이징 상무부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스템 관리를 시행하면서 이전보다는 소요 시간이 많이 줄어 10일 근무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HDMI 모니터⁵¹⁾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30%)의 부과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2018년 9월 WCO는 한·중 간 품목분류가 상이한 차량계기판용 메인보드에 대해 한국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국 수입관세가 6%로 낮은 속도계의 부분품(HS9029.90)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보다 고세율(10%)인 차체의 부분품(HS8708.29)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WCO 분류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향후 어떻게 국내법을 운영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해관(세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목분류의 적용을 추진하는 ‘전국 해관(세관) 통관 일체화’라는 통관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세관의 선진국형 행정제도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해관총서 상품검험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9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중요한 식품 수출의 경우 긴 통관시간이 수출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통관일체화 개혁 실시 후에는 통관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다. 또한 검사검역을 샘플 추출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통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 통관의 경우 2~3일, 샘플 검사에 해당될 경우 10일 정도의 통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6년 이상의 인삼(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건식품)의 등록 및 통관⁵²⁾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 현재도 연근제한, 표면색, 함량기준 등의 항목이 불합리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52)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된다.

통관·검역과정에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고려인삼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는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질량표준을 우리 홍삼 수출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WTO에 따르면 중국은 199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80건의 반덤핑 조사(세계 6위)를 실시하였고, 총 221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세계 6위)하였다.

중국은 201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총 13건, 조사 중인 품목이 총 3건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13개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10가지 품목(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폴리아세탈, 메틸이소부틸케톤, 스티렌, 니트릴 고무, 페놀)과 현재 조사중인 3건 중 스테인리스 압연 및 열연강판(철강금속제품)을 제외한 2개 품목(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이 석유화학·고무 제품인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는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히 중국으로 석유화학·고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품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년 7월 1일 반덤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2017년 1월 1일 5년 연장 징수가 결정되어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스페놀A, 아세트, 아디프산, 테레프탈산도 10년 이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중국은 장기간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보조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은 가솔린 차량 대비 가격이 비싼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에 포함된 차형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중국은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동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형을 포함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5월 22일 중국 전기차 배터리 리스트에 한국기업 3개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베이징벤츠 차량도 형식 승인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 목록에 처음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테슬라 모델3, 베이징벤츠 E 클래스)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점차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대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0년부터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6%)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응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8월 8일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9개 부서는 “철강산업기업 지지조치 규범화에 대한 공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정책 투명화, 공평화, 공개화 원칙 하에 선의의 경쟁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녹색발전, 혁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WTO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봇 기업 보조금 비중 확대

「중국 제조 2025」에는 2025년까지 로봇·양자컴퓨터·항공우주·신소재·바이오·AI(인공지능) 등에서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 기업에 약 3,000만 위안(48억 7,9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I치점(AI奇点)이 분석한 중국 베이징시 정부의 로봇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R&D, 상용화 등에 걸쳐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글로벌 23위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0년 이전 세계 자동화 10위 국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 덕에 중국산 로봇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중국산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13만 1천대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올해 역시 급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1월과 2월 중국산 로봇 생산량은 1만 8,7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 늘었다. 2017년 연간 데이터를 보면 시아순(SIASUN:新松机器人), 이스툰(ESTUN:埃斯顿), 스텝(STEP:新时达), 탑스타(TOPSTAR:拓斯达), HNC(华中数控) 등 중국 선두 로봇 기업은 각각 24.56억 위안, 10.79억 위안, 34.14억 위안, 7.64억 위안, 9.85억 위안의 매출을 일궈냈다.

하지만 중국 상장 기업은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오샹증권(招商证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시아순, 이스톤, 탑스타, 스텝 등 4개 기업의 정부 보조금은 순이익의 30%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로봇 기업이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일부 기업의 이익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둥의 경우 광둥 불산(佛山)시에서 인증한 로봇 제조 육성 기업 보조금은 50만 위안이며, 로봇 시스템 통합 분야 육성 기업 보조금은 30만 위안이다. 로봇 본체 제조에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해낸 기업에는 매년 높게는 800만 위안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공업정보화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로봇 생산 관련 기업은 이미 800개가 넘어섰다. 이 중 200개는 로봇 본체 제조 기업이며, 대부분 모듈과 가공 등 로우엔드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 가치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설립에는 사실상 산업단지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어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 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재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조달망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 공공자원교역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과거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각 조달센터나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 외국 기업들이 조달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⁵³⁾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⁵⁴⁾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라 구체적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⁵⁵⁾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일부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3) 중국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4)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이다. 중·스위스 FTA(제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5)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다.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었다. 2013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現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가 제외되었으나, 2017년 10월에는 오토바이 헬멧과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가 CCC 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2019년 11월 현재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27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⁵⁶⁾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⁵⁷⁾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56) 중국의 CCC 인증 대상 제품군은 ①전선 케이블,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 ③저압 전기장치, ④소형 전동기, ⑤전동공구, ⑥용접기, ⑦가정용 기기, ⑧음향 영상설비, ⑨정보기술 장비, ⑩조명 전기기기, ⑪차량 및 안전제품, ⑫차량 타이어, ⑬안전유리, ⑭농기계, ⑮전자통신 단말기, ⑯소방제품, ⑰안전기술 예방설비, ⑱무선인터넷설비, ⑲인테리어용 제품, ⑳완구류 제품, ㉑방폭 전기기기, ㉒가정용 가스레인지 등이다. 2019년 11월 20일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총 127개 품목이다.

57)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 대상 전기 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해관 통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관 출입국 검험검역기관 모두 통일된 기준을 실시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해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관 신고 시 사전 식품 라벨 등록(備案) 절차를 취소하고, 식품 라벨자료와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 통관을 시킴으로써,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 했다. 따라서 제품 수입시마다 기업들은 라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시로 검사 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해관의 합병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 방법」(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 제도를 통해 독성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되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 규정된 화학물질들은 특별히 허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출입 신청이 금지된다.

2018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목록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 거래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채택 관련 로테르담협약 등에 의한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제한대상 화학물질을 기존 162개에서 10개로 조정했으며, 이들 화학제품들은 허용된 용도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새로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출입 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수출입엄격제한유독화학물질목록」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환경등기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环境管理放行通知单(방행단, 유효기간 6개월)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新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新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에 따라 환경관리등기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 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⁵⁸⁾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범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 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⁵⁹⁾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NMPA의 수입의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국 CFDA(現 NMPA)는 신약과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임상시험데이터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 내 임상시험 수행으로 인해 타국가 시판허가에 비해 6~7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로 중국 시판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NMP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⁶⁰⁾된다. 또한

58)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 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다.

59) 2018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시장관리감독총국(SAMR)으로 식품안전 분야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의약품, 화장품 분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설립되었다.

60)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NMPA는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도 생물학적동등성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은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NMP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NMP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NMP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014년 6월 1일 시행) 제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NMP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 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NMP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NMP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 절차 변화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NMPA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 국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푸둥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심사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 강화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해시 푸둥신구를 대상으로 시범적,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후 위의 푸둥신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8년 11월 10일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하여 중국 전역에서 등록관리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후 관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더욱더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안전성 등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NMP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의 위생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은 약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기능성화장품)은 약 4~8개월에 이르고, 제품 당 검사 비용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이 5,800~7,800위안, 특수용도화장품이 9,100~36,800위안이며, 그 외에 제품 기능별 추가 비용 및 기타 비용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비특수용도화장품이 6~8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이 8개월~1년에

이른다. 또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NMP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2월 중국 CFDA(現NMPA)는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2007)을 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하였다. 동 규범에는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존용원료, 이화학, 미생물, 독리학, 인체안전성,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개정 규범에 신규로 포함되었거나 이전보다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안전 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없이 2016년 1월 31일부터 동 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기요구사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구사항은 번째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젓갈, 조미김의 과도한 검역기준 완화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한국(식품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젓갈을 수산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8,000 cfu/g)를 적용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여 수산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 및 개정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우리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5년 젓갈의 미생물 기준을 개정(세균수 $n=5$, $c=2$, $m=10,000$, $M=100,000$, 대장균군 $n=5$, $c=2$, $m=10$, $M=100$)하였다.

조미김의 경우 중국은 해조류 및 해조류 가공품 중 즉석조류제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 규격(30,000 cfu/g 이하)을 적용, 조미김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 및

개정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우리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 김의 세균수 규격을 완화($n=5$, $c=2$, $m=30,000$, $M=100,000$)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 자료 확보 및 지속적 의견 제기로 우리 수출 기업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국가지장 관리감독총국(SAMR)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SAMR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⁶¹⁾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에 있어야 한다. ‘성분구성’은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국 지재권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 전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 지식

61)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SAMR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 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4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행동 계획(2014~20년)」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새로운 상황 하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이후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2018년 지식재산권 전략의 심도 있는 실시와 신속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 제정 작업을 착수 하는 등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통계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만 건)이 처음으로 미국(50.4만 건)을 추월하였으며, 2017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이 154.2만 건(2017년 대비 11.6% 증가)으로 4년 연속 백만 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상표 출원은 737.1만 건(2017년 대비 28.2% 증가)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 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과 전국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28.3만 건(2017년 20.1만 건), 행정기관의 모조품 침해조사 건수가 21.5만 건(2017년 20.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미국 USTR은 중국을 15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의 지식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2019년에는 관세부과를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중국 「상표법」에 대해, 3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이후, 2019년 4월 4차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2019년 4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수정(2019년 4월 23일 시행)을 하였다. 또한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한 데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설치하였고, 2019년 1월부터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2심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기존 여러 부처가 관리하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동 법의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투자 장벽

2019년 개정판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 시행

2018년판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 전·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투자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 목록 외에도 투자 장려업종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국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과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로 구분하고,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임을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첨부했다. 동 목록의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는 기존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투자제한업종 목록(限制外商投资产业目录)과 투자금지업종 목록(禁止外商投资产业目录)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이하 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개정)」를 발표하고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의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은 계속 시행했다. 이로부터 네거티브리스트와 장려산업목록이 분리됐다.

2019년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19년판’을 발표했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했다. 2019년판 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2018년판에서 더 축소했다. 2018년판은 제한 목록과 금지목록 수를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했는데, 2019년판은 2018년판 대비 8개 항목이 감소한 40개 항목을 명시했다.
- 2)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상용차, 승용차 기업의 외자출자 비중 제한을 없애고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승합차 업체에 투자

할 수 없다’는 규제도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금융 분야의 모든 출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 3)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과 문화 산업에 대해 개방을 확대했다.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목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을 취소했으며 ‘국내선박대리, 국내다축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 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를 삭제했다. 공공산업 분야에서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했다. 중국 측 지분 통제로 규정했던 영화관 건설 및 경영, 공연 중개기구를 개방하는 등 문화 분야의 개방도 이뤄졌다.

2019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 시행

2019년 6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년 개정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이하 FTZ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식 발표했다. 동 조치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자유무역 시험구에 적용됐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19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는 기존 45개에서 37개로 감소하였다.
- 2)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 추진했다. 교통운송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의 해운사업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없앴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내에서 가스와 난방 공급 시스템’과 ‘영화관·공연 중개회사’는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철폐했다. 또 부가 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국 내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저장 전달류, 콜센터 등 세 가지 사업의 외자 도입 제한을 철폐했다.

- 3) 농업, 광업, 제조업의 투자 진입을 완화했다. 농업의 경우 중국 국가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 식물 자원개발에 외국인 투자 금지규정을 철폐했다. 광업 분야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에 있어서 이전에 합자와 합작만 가능케 했었던 조치를 없앴다. 또한, 폴리브덴, 주석, 안티몬, 플루오라이트 탐사 및 채굴을 금지했던 규정을 철폐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선지(宣紙), 먹(墨錠)의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규정을 삭제 조치했다.
- 4)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 ‘테스트필드(試驗田)’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19년 개정된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적인 개방 조치를 기반으로,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수산업, 출판물 인쇄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며, 지속적으로 선진적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의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 생산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된 「기업평균연료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병행관리 잠행방법」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량을 연간 생산·수입량이 3만대 이상인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 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국 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2018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은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등에 대한 외자 지분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펀드, 선물 회사의 경우 외국계 지분한도가 49%, 생명보험사는 50%까지이나, 이들 업종의 외자 지분한도를 2018년 말까지 51%로 확대하고 3년 내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말까지 중국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외자 지분한도를 폐지하고, 합자 증권사에 최소 1개 이상 중국 증권사가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 중국내 보험대리업 및 손해사정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개방조치도 발표했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중국 감독 당국의 비공식적 규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조치가 실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 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상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총 8번 개정하였다.⁶²⁾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 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⁶³⁾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⁶⁴⁾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62) 2018년 개정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전국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이 있었다.

63)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64)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중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출판관리장점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점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 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 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인도네시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은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 이후 2011년까지 약 2배 증가하면 2011년 30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다시 2017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8년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수출 84.0억 달러, 수입 95.7억 달러). 2019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4.4%), 철강판(8.9%), 합성수지(7.3%), 반도체(5.5%), 편직물(5.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0.9%), 천연가스(9.2%), 의류(7.1%), 철강판(5.1%), 목재류(4.7%)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6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4위 수입대상국이며(2019년 기준),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6위 수출·수입대상국이다(2018년 기준).

1968~2019년 9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12.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5~2019년 9월)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5.0%), 제조업(34.8%), 농업·임업·어업(10.2%), 도매·소매업(3.6%) 등이다. 한편, 1962~2019년 9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7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인도네시아 FTA는 2007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 동 FTA의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2014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9년 3월 협상 재개 이후 2019년 11월 최종 타결되었으며, 양국이 참여한 RCEP은 2019년 11월 잠정 타결된 상태이다.

수입규제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 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으나, 3G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업체(삼성전자, LG 전자)는 4G 휴대폰을 인니 현지에서 직접 조립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어 현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애플의 경우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R&D 센터를 건립하여 로컬컨텐츠 요건을 인정받기로 하고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애플 혁신 센터를 인도네시아에 개소하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휴대폰 조립 공장의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경로로 수입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는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향후 출국 이후 재입국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휴대폰을 최대 두 대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기기의 사용은 제한된다.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⁶⁵⁾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⁶⁶⁾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2017년 발표된「산업부 규정 (36/M-IND/PER/9/201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SNI 인증 시험기관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자제품(SNI 인증 의무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 인증시험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18년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2018년 제110호)」에

65)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66)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르면 합금강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대외무역국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법은 세관을 거치기 전 기술 검사의 진행을 의무로 하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⁶⁷⁾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

67)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다.

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⁶⁸⁾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 22)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1,147개 최종 소비재 품목(HS 기준)을 대상으로 수입시 부과하는 선납 소득세(PPh 22)를 종전 2.5% 또는 7.5%에서 7.5% 또는 10%로 인상하였다. 선납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8)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이다.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하다.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7년 말 수입금지·제한(LARTAS) 품목에 대한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제를 도입하였다. 사회 안전, 국민 건강 등과 같이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을 제외 하고는 세관의 확인 없이 통관이후에 해당물품의 주무부처가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HS 기준 48.3%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금지·제한 품목에 대해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였으나, 동 제도 도입 이후 국가표준인증(SNI), 전문기관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제출 대상 품목 등이 통관이후(post-border) 확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관의 확인대상이 20.8%에 대폭 감소되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에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⁶⁹⁾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국 또는 PFA(Pest Free Area) 인정 품목에 대해서는 자카르타 항구(판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기준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69)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감,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PF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세지역(KB)에 대한 규제완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 11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령을 전면 개정하여 보세구역(KB)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보세공장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고, 위탁가공시 원재료의 재반입 기한도 반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 테스트 등을 위한 일시반출도 허용하였다. 특히 자율 관리 보세구역(KB Mandiri)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관 직원이 모든 입출고 화물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출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송화물 통관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말에 탁송화물 수입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No.182/PMK.04/2016)을 통하여 탁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간이신고(CN) 대상을 종전 중량 기준(100kg 이하)에서 금액기준(미화 1,500달러 이하)으로 변경하고, 간이신고 대상에 대한 관세율도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해 7.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정을 통해 면세한도도 종전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재개정을 통하여 미화 7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면세한도 산정도 선적 건 기준에서 하루 수령하는 모든 우편물 및 탁송화물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조달은 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2018년 11월에도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205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9,589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②LSPro의 서류 심사-③기술 심사-④패널 최종 검사-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 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SNI 강제인증 품목 확대 추세에 따라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2015)」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4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8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7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6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라벨 부착의무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 면허(SIUP)가 취소된다.

할랄 인증 의무화

「정부령 2019년 제31호 (PP No. 31 Tahun 2019)」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득해야 한다. 비할랄(하람)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반드시 할랄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할랄 인증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전에 MUI에서 관장했던 할랄 인증의 접수, 검사 및 발급이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할랄인증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할랄 검사 기관(LPH)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2019년 1월 갱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신청하여 분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농산물을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본부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근교 판중프리옥항을 통한 신선과일 수입을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10월17일부터 「할랄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원료를 사용하는 공산품 등 하람 성분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초기를 감안하여 품목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선 식음료의 경우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2021년 관련 제품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할랄 인증의 의무화는 유예되었으나,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의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2019년 11월 현재 SNI 강제 의무 대상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범위가 다양화(2019년 식수와 설탕 SNI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 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SNI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SNI 신청 대상의 제조사는 ISO9001을 보유한 회사나 미보유 회사로 나누어 인증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9월 이후 접수된 건부터는 ISO9001을 보유한 제조사에 대해서만 SNI 인증서가 발급된다.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SNI 신청과 심사 진행은 가능 하나 ISO9001을

신청 진행 중에 있다는 소명 확인서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ISO9001:2015가 표준 기준으로, ISO9001:2007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ISO9001:2015을 다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월 현재 한국산 상품 4건(냉연코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석도강판(Tin Plate), 질산암모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2018년 2월 19일 반덤핑 최종 판정이 내려져서 KP켄텍(4.8%), 롯데화학/SKC/도레이/휴비스(5.9%), 코오롱인더스트리(8.6%)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석도강판(Tin plate)의 경우 2019년 2월 14일까지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2024년까지 반덤핑관세부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반덤핑 규제는 모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세이프 가드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월 현재 한국제품 중 총 4건(비합금 평판강판, I-H형 합금강,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벽용 타일,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중 비합금 평판강판의 경우 2012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한 후 2014년 7월 22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I-H형 합금강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조사가 개시되어 2015년 1월부터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고 재심 판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연장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벽용 타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후 같은 해 6월 최종 판정이 발표되어 2018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벽용 타일에 대해 셰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8년 10월 9일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셰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후 2018년 10월 25일에 2년 간 셰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판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들어 증발기(2019년 6월 12일), HS 5208, 5209, 5210, 5211, 5212, 8407 류의 직물(2019년 9월 18일), 과당시럽(2019년 10월 28일)에 대한 셰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셰이프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이며, 최근 들어 반덤핑 규제보다 셰이프가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투자제한목록(Investment Negative List)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정된 동 리스트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신규·추가 개방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개정 투자제한목록에서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Appendix I)하고 있으며, Appendix II의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SMEs를 위한 업종으로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Appendix III에는 투자지분, 특별 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2014년 4월 목록과 2016년 5월 개정 목록을 비교해 보면, 4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완전 철폐되었으며, 영화산업·전자상거래·관광·보건

등 총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배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투자만 허용해 오던 전자상거래(플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 daily deals, 가격비교, 온라인 광고)와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백화점(면적 400~2,000m²)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018년 11월에는 제16차 경제개혁패키지(추가) 발표를 통해 54개 세부산업분류에 대한 조건부 개방(중소기업 유보 또는 합작 조건) 등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총칙규정 등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진출 과정뿐 아니라 전 기업의 사업 등록 및 허가사항을 OSS System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투자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동 OSS System 도입 초기에는 경제조정부에서 운영 및 관리 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2018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상품 무역은 수출 486.2억 달러, 수입 196.4억 달러, 무역수지 2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교역액 682.7억 달러는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4.9억 달러)보다 약 140배 증가한 규모이며, 비교적 최근인 2012년(216.7억 달러)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중국, 미국, EU, 일본에 이어 5대 교역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출만 대상으로 하면 일본을 제외하고 4위 수출대상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2019년1~9월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3.9%), 평판디스플레이·센서(16.0%), 무선통신기기(6.1%), 기구부품(4.7%), 석유제품(3.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27.2%), 의류(17.6%), 평판디스플레이·센서(6.3%), 신변잡화(5.0%), 컴퓨터(3.2%) 등이다.

양국의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1962~2019년 9월 누계 기준 18백만 달러)는 미미한 반면,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고 최근 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투자는 1968~2019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229.0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이른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투자금액은 114.4억 달러로 전 기간 누적금액의 절반가량에 달해 최근 급격한 투자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5년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68.7%)이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1차금속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는 금융·보험업(8.3%), 도매·소매업(5.9%), 부동산업(5.7%), 광업(4.9%) 등도 주요 업종이다.

한국과 베트남 간 FTA는 2007년 한·ASEAN FTA 상품 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 동 FTA의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2019년 11월 잠정 타결된 RCEP에도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 철, 비금속 등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Decree No. 125/2017/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술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수입규제

무역 거래 활동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대외무역 관리법」(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05/2017/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규정 등 다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결정문 등)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을 「대외무역관리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동 법의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관리법에 관한 시행규칙(12/2018/TT-BCT)을 선포하고, 산업무역부 관리 하에서 일부 소비재, 의류기기 및 중고차 수입 금지 품목과 일시 수입, 재수출, 전입 활동에 대해 임시적으로 활동을 금지하는 품목번호 목록을 규정하였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베트남은 2013년 11월 발표 시행령(「Decree 187/2013/ND-CP」)과 2014년 1월 발표 시행규칙(「Circular 04/2014/TT-BCT」)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2개 품목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특히,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담배, 국가안보 관련 물품, 국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목재류, 민간 항공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무장 항공기와 군용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갑차, 페인트볼 총기류 및 기타 국가 안전과 방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중고 기계·장비 등의 수입은 별도 규정을 통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FDI 기업의 무역 및 국내 유통 제한, 사업등록허가 절차 개선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들을 시행령(「Decree 23/2007/ND-CP」)과 그 지침(「Circular 34/2013/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투자

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WTO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개방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령(「Decree 09/2018/ND-CP」)을 통해 사업등록허가, 소매점 허가, 사업 등록허가 불필요 등 사례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라이선스 규정 폐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07/2017/TT-BCT)에 따라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2017/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졌다.

수입품의 품질검사

베트남은 2007년 제정된 「제품·재화 품질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Law 05/2007/QH12)에 따라 수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동 법 및 관련 시행령(Decree 132/2008/ND-CP)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검사 대상 품목(Group-2 품목)은 안전 위험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에 근거해 관할 행정부처에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검사, 상품 라벨 검사,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검사,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입자는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을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당 표준을 표시해야 하며, Group-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규정 적합성 공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중 하나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Đ-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됐으나, 이미 각 부처별로 관할 품질검사 대상 품목을 지정한 것은 물론, 보다 세부적인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 기존 품질검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급 제품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 수입규제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법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완성차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 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함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완성차 수입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철폐 이전인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규정하는 결정문(Decree 116/2017/ND-CP)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수출국가의 허가를 받은 테스트 인증서인 VTA(Vehicle Type Approval)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와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국산차 육성을 위한 완성차 수입의 비관세 장벽 조성으로 수입자동차의 베트남 유통·판매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기준은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 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변화로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국내 생산 9인승 이하 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현 '생산기업의 차량 판매가'에서 '생산기업의 차량 판매가-현지 생산 부품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동 방안은 특별소비세법 일부 조항 개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베트남 국내 생산 차량의 현지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2015년 11월에 개정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T」)이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나 세부지침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기계 수입 관련 결정(「Decision 18/2019/QĐ-TTg」)이 2019년 4월 19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1)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 또는 일부 기계의 경우 제조연한 15년 또는 2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착 연도기준), (2)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준(QCVN) 또는 국가표준(TCVN), G7 국가표준 또는 한국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고기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 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신규 시행규칙 및 결정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 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입 가능 중고기계의 기술표준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정이 마련됨에도 수입 중고기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HS 코드 상이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기존 한국에서 적용하였던 HS코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HS코드 불인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조미 김의 경우 한국에서는 HS코드 2106.90이 적용되나 베트남에서는 HS코드 2008.99로 분류되는 등 동일한 품목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다른 분류기준에 따라 HS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수입 시에는 베트남 현지 HS코드 분류에 따라 신고하거나 HS코드를 수입자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HS코드를 확인받은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추징 등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 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신고서류의 검토 및 수리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요구 서류는 수출입 신고서,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 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HS Code 분류 및 수입관세 부과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어려움 △사소한 오류 등을 근거로 한 추가 부담금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세관간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타기관의 갖가지 승인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를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관리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의 이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직인이 수기로 날인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전자 직인이 날인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 서명 차이를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및 관행

베트남은 지난 2009년 9월 KOICA 무상원조를 통해 구축된 정부전자조달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각종 입찰공고(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각종 법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을 통해 각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기준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6,000여 개의 사업 조건 중 대다수가 개정법이 사업 조건 규정을 허용한 국가안보, 사회질서, 보건 등의 목적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인허가 조건은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작성한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물질 제조, 유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등 7개 분야가 국가 독점 상품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독점 서비스 분야에는 해양 수로안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템 개발, 상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림 이용 등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 기준 9개의 국가경제그룹(국영 대기업)과 12개의 국영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 밖에도 다수 기업에 국가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와 보호 하에 운영되고 있다.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업진출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점금지 규제

2018년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 발효된 경쟁법은 반경쟁적 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 베트남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 경쟁 소송절차,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경쟁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장했다. 베트남 당국의 독점기업에 대한 관리·감시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독점사례를 조사·감독하기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의 국가 경쟁관리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위원회 인사배치와 주요 업무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초안을 작성 중이다.

시장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법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은 ① 기업의 재정능력 및 규모 ② 기술 및 기술 인프라 ③ 사회기반시설의 소유, 입수, 및 평가 권리와 같은 요소들에 바탕을 둔다.

그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쟁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 경쟁법은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 행위 등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독점 행위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법 시행 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베트남의 WTO 무역상 기술장벽 통보 현황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TBT 협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8년 베트남이 WTO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152건이며, 2016년에는 20건,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23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베트남이 WTO 사무국에 총 20건의 TBT를 통보하였다.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 내 품질검사 강제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베트남 CR 인증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R 인증은 인증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1~3년간 유효하다. CR 인증 대상 품목은 가솔린·바이오연료·디젤,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 제품,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건축자재), LPG, 전자파 제품,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비료, 식품, 가축사료 등 총 12개 품목이다.

전기전자제품을 예로 들면, 전기안전과 관련해서는 적용 규격 QCVN 4:2009/BKHCN을 따라야 하며, 대상 품목은 순간온수기, 온수저장기,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관련 제품,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오븐, 휴대용 조리기구, PVC 절연케이블(450/750 V 이하), 휴대용 침수 온수기, 커피포트, 손 건조기 등 13개 품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자파 방해(EMC)와 관련해서는 QCVN 9:2012/BKHCN이 적용되고, 대상 품목은 순간온수기, 수지형 전기드릴, Ballast 내장형 전구, 진공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7개 품목이 포함된다.⁷⁰⁾

베트남에서 CR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STAMEQ(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에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관련 서류를 갖추어 QUACERT(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산하 CR 마크 인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CR 인증은 국내에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대행하고 있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7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웹페이지

(<http://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84/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22&slfmlId=TB30000000000130&ftaNatnCd=99#nohref>) 참고.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변동

2011년부터 「경제적·효율적 에너지 사용법(Law 50/2010/QH12)」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산업무역부 주관 하에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기기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Decision 04/2017/QD-TTg)」이 공표돼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개 품목(LED 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으며, 기존 지정 품목 중 승용차의 적용 범위가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발적 이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Circular 36/2016/TT-BCT)」이 공표돼 2017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 인증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6개월을 주기로 갱신해야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 등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사회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역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준비해야 한다.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의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일정 기간마다 고시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제품에 부착되며 원산지, 제품코드,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된다.

세이프가드

2019년 12월 말 현재 베트남은 글루탐산소다(Monosodium glutamate), 반가공 합금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착색아연도금강판(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비료(Certain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등 총 4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이다. 베트남은 2018년 7월 26일 한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선 및 압연강재(Wire and Rolled steel)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13일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선재 제품은 베트남 국내 생산이 불가한 고품질 제품으로 인정받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덤핑

베트남은 WTO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베트남은 총 7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 관련 반덤핑 관세 부과는 1건이며, 추가적으로 1건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해 잠정 반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6년 3월 10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도금강판(Coated steel sheet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최종 판정이 있었다.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2017년 4월 14일부터 베트남은 POSCO 및 POSCO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 4개사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7.02%의 반덤핑 관세를, 기타 한국 기업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은 한국산 및 중국산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동국제강 및 SK 네트워크와 거래하는 한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0.48%, 동부인첸스틸 및 ST 인터네셔널과의 거래 경우 4.71%, 기타 한국기업의 컬러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25%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상 8대 중점 투자우대 분야(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를 두고 있으나, 각종 엄격한 기준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찌민, 기타 항만도시 인근의 공단 지역이 제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도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 지역 대부분이 투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최소 공단임대면적(1ha) 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공단은 경우에 따라 1ha 당 투자금액 2~3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투자우대 지역인 나후지역의 경우 각종 산업인프라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힘든 상황이라 실제 투자는 공단지역으로 제한된다.

이전가격 과세 규정의 강화

베트남 과세 당국은 최근 한국기업이 많은 하노이시, 호찌민시, 박닌성, 동나이성 등에 이전가격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중점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 이전가격 조사가 단순한 물동거래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료, 기술로열티, 경영자문료 등의 용역거래로 점차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Decree No. 20/2017/ND-CP(2017년 2월 24일)와 Circular No. 41/2017/TT-BTC(2017년 4월 28일)를 공표했으며, 동 개정 법령은 2017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기존에는 많이 과세하지 않던 용역거래(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다수가 세무 조사 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세무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 규정의 변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고용주는 17.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동 조치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사회보험료 산정 시 최고 상한금액(ceiling price)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 및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모두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당이 최고 상한 기준금액인 2,600만 동(약 1,140달러)을 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 의무 납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제도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용이 증가되고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소매·유통업 진출 제한 및 신규 시행령

베트남은 외국인의 소매·유통업 영위에 대해 ‘조건부 투자분야’, ‘경제적 수요 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와 같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시행령 No.09/2018/ND-CP)을 통해 외투법인의 무역 및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발급 요건과 소요시간, 관할 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소매유통/유통류 수입 및 유통/물류 서비스/상품임대/무역촉진 서비스/무역중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입찰 제공 서비스 등 사업분야에 대해 영업허가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이외 별도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다만, 수입/수출 및 도매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ENT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이제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여전히 ENT 심사대상이며 ①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 미만 ②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 ③ 미니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NT 심사가 제외된다.

신규 시행령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였다. ENT 신청 서류 접수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ENT 위원회를 개설하고,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ENT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ENT 심사 결과 발표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산업무역국(DOIT)은 ENT 심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산업무역부(MOIT)는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SEL의 경우 산업무역부(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 영업일 내에 발급된다.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2020년 중 개정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법 (Law No. 67/2014/QH13, 2015년 시행)을 개정하였고 2020년 동 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안은 1) 투자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가격 및 경매 입찰 규정, 3) 프로젝트의 기계 및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4) 기업등록 증명서의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5) 투자인센티브 조건 변경 및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2016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신투자법에서 투자 금지 1개 분야(폭약 관련 사업)를 추가하고 조건부 투자 분야를 267개에서 243개로 조정한 개정 신투자법(Law No. 03/2016/QH14)을 발표하였고, 2019년 8월 29일에는 투자법상 조건부사업에 대해 12개 사업이 제외되고 6개가 추가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베트남의 투자법에서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 등 투자 조건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Decree 60/2015/ND-CP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시행령(118-2015-ND-CP)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업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과 법적 근거 등이 국가기업등록포털⁷¹⁾을 통해 발표되는 바, 이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발효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7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금지된 콘텐츠⁷²⁾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 게재, 전송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71) <https://dangkykinhdoanh.gov.vn/en/Pages/default.aspx>

72) 금지된 콘텐츠는 동 법의 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있으며(제26조의 1항 및 2항),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은 베트남 내에서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국외 업체는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 3항).⁷³⁾

동 법의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서비스,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도메인(domain) 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결제 대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통수단 연결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이메일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⁷⁴⁾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CPTPP의 경우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데이터 현지화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을 포함하며, 이에 비합치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PTPP 협정에서 베트남은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을 보면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비합치조치로 포함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법을 CPTPP 회원국의 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의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수집 처리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 기타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공급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립된

73)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24/2018/QH14)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개발·분석·처리하는 업체로서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번역자료 참고.

74) KOTRA 해외시장뉴스(2019.2.27.), 「[무역관 르포]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기업 부담 덜어준다」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ldx=172833>

허가받은 업체와의 상업적 약정 요건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베트남 내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제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저장을 베트남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제의 적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⁷⁵⁾ 반면, 전자게임업의 경우 국경 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합작 형태(외국인 출자 49%까지 허용)의 상업적 주재만을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의 기발효 FTA 협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베트남 내에서도 동 법에 대해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향후 동 법의 적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 표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8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6만 4,894건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산업재산권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및 역내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8년 IP Index에서 베트남은 13.19/40점을 받아 조사 대상 50개국 중 40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에서도 5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은 2018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이 작성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 관련 연례 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UST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위조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도서·

75)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협정문 중 베트남측의 서비스 양허표 참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용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민간단체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2018년 6월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결과,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은 2013년 81%에서 2017년 74%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수준(5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2017년 기준 4억 9,2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 미비와 능력 제약으로 인해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했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선스 계약

해외 제조사는 직접 수입, 등록된 상표·제조방식·산업디자인 등을 사용한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현지 배급사 또는 에이전트 지정, 신규 투자법에 따른 벤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베트남 내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반드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정보(성명, 주소), 라이선스의 기초정보, 라이선스 범위(지리적 제한 명시), 계약 조건(사용료 등), 라이선스 가치, 허가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을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청서, 계약서, 지적재산의 보호명칭증명서, 공동소요자의 승인등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및 전문지식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 부담 및 위험 분산 등 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해야할 만큼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제, 관할 당국 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하는데 수반되는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적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2차 라이선스(sublicens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베트남에는 2차 라이선스의 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라이선스 계약자가 자신의 라이선스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나, 2007년 WTO 가입 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2007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상법 시행령」(Decree 35/2006/ND-CP)과 시행규칙(Circular 09/2006/TT-BTM)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ASEAN FTA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49%)을 철폐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해 상업적 주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점 설립이 허용되도록 양허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까지 베트남에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률은 없는 상태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매업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해외 가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자금의 조달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비효율적 공급망, 자산비용 상승 및 직원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 및 디자인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진출 시 조속히 브랜드명과 상표를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을 따르기 위한 검증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업 허가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합작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 아직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 법령의 정비, 소비패턴의 변화, 경제개발 속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상표권 침해이다.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의 2018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가 전체 지식재산권 피해사례의 97.8%를 차지, 총 1,717건에 달했으며, 작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상표권 침해 관련 피해금액은 약 84만 달러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국제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표가 등록된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한데,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제에서도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실제 사용 여부보다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 증가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 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베트남 노동법 개정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제5차 노동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휴가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⁷⁶⁾

베트남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오히려 초과근로 허용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기업들의 편익이 제고되었다. 반면, 노동법 개정안에서 법정 공휴일이 1일 추가되고 노동자의 정년이 남자는 60세에서 62세로,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6)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의 베트남 「노동법」 자료; 박재명(2017),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시간·휴식 규정의 개정 동향」 참고.

말레이시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한·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증가하면서 2013년 역대 최대 규모인 196.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2016년(150.4억 달러)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2018년 192.0억 달러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8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89.9억 달러와 10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20.7%), 반도체(14.0%), 합성고무(6.2%), 철강판(5.5%), 동제품(4.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20.6%), 반도체(20.4%), 석유제품(6.8%), 컴퓨터(4.5%), 알루미늄(3.5%) 등이다.

1962~2019년 9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7.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투자의 상당 부분이 2000년 전후 등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5년(2015~2019년 9월)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투자금액은 2.5억 달러, 비중은 0.4%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5년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71.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9.5%), 도·소매유통(8.8%)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반대로 1968~2019년 9월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54.5억 달러,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투자금액은 9.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72.7%), 도매·소매업(8.5%), 금융·보험업(7.8%)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는 2007년 6월부터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또한 RCEP이 2019년 11월 잠정 타결되었으며, 한-말레이시아

FTA는 2019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⁷⁷⁾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6년 12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링깃/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77)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한다.

말레이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품목마다 다르다는 점도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허가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 법⁷⁸⁾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관할한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로 관련 서류는 MITI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⁷⁹⁾를 수입할 경우 AP(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한다.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 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제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8)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에 따른다.

79)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이다.

반덤핑 조사 및 제소⁸⁰⁾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89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49개 국가 중 15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53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과 45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외국산 저가 철강수입품들에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이 말레이시아

80) 자료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By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ByRepMem.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InitiationsRepMemVsExpCty.pdf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_MeasuresRepMemVsExpCty.pdf
- <http://www.matrade.gov.my/en/28-malaysian-exporters/trade-statistics/3792-top-10-major-import-countries-2017>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anti-dumping&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eng_main/main_carian_tajuk.php?key=safeguard&tarikh_pewartaan1=&tarikh_pewartaan2=&Cari=Search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한다.

2019년 9월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
상품은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 냉연압연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등이다. 한국산 폭 1,300mm
미만 냉연코일(Cold-Rolled Coils)에 대한 관세는 당초 2016년 5월 24일
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포스코는 3.78%, 포스코-베트남은
3.06%, 현대제철은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가 결정되었으나, 2019년 로컬밀인 CSC Sdn. Bhd.의 재심 요청에
따른 심의 결과로 2019년 5월 8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포스코는 0%,
포스코-베트남은 3.06%, 현대제철은 11.55%, 그리고 기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21.64% 부과로 변경되었다. 한국산 냉연압연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form(CRSS))에 대한 관세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년간 부과 된다. 포스코는
4.44% 기타 한국기업은 7.27%를 부과하고 있다(현대제철과 현대BNG스틸은
해당 없음).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5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 까지 5년간 14.91%를
부과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2011년 8월 22일에 조사가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⁸¹⁾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 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년 292,238톤으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이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 부과, 그 이후 1년 간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되었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후판(두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해당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8년 7월 1일부로 만료되었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⁸²⁾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년 80만 7,647톤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했다.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앞서 이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

81)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이다. 열연강판 제품은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제조 등에 사용된다.

82)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이다.

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만톤과 냉연코일 1억 4,50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5월 29일에는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⁸³⁾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인 철근의 수입량은 2012년 10월~2013년 9월 동안 259,331톤에서 2013년 10월~2014년 8월 529,001톤으로 104% 증가했고, 2014년 10월~2015년 9월 동안에는 1,347,593톤으로 155%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6년 9월 27일부로 긍정 예비판정을 내리고, 향후 200일간 13.90%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후 2017년 4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3년간 강철 와이어 Rods 및 변형된 철근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최종 세이프가드 결정을 내렸다.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3.90%, 2018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2.90%,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11.90% 이다.⁸⁴⁾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83) 관련 한국산 품목은 KHS 7213.10, 7213.91, 7213.99, 7227.90이다.

84) [ederalgazette.agc.gov.my/output/pua_20170414_P.U.\(A\)1232017.pdf](http://ederalgazette.agc.gov.my/output/pua_20170414_P.U.(A)1232017.pdf)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⁸⁵⁾과 불투명한 조달체제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85)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허 세제를 부여한다.

요건(100만 링깃(약 2.7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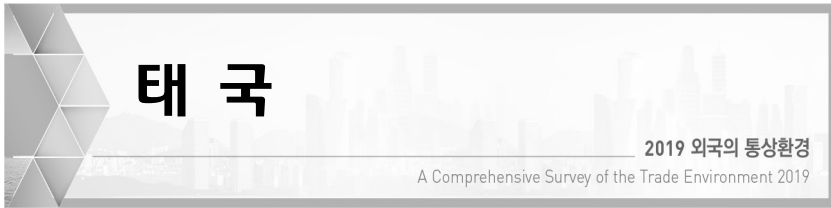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⁸⁶⁾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86)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siness Unit)는 완제품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태국에 대한 상품 무역 규모는 총 140.9억 달러(수출 85.0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2009년 제외)하여 2011년 138.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2019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7.8%), 반도체(6.4%), 합성수지(5.1%), 석유제품(3.9%), 금은·백금(2.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9.2%), 기호식품(6.0%), 컴퓨터(4.7%), 가정용회전기기(3.7%), 목재류(3.6%) 등이다.

한국-태국 간 투자관계는 주로 한국의 태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8~2019년 9월 동안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27.0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금액은 4.9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4.9%), 도매·소매업(20.9%), 건설업(7.8%), 금융·보험업(6.4%) 등이다. 한편 1962~2019년 9월 기준 태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44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양국 간 FTA는 한·ASEAN FTA의 투자협정이 2009년 9월 1일 발효,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또한 RCEP이 2019년 11월 잠정 타결되었으며,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조달

국산품 우대 규정이 삭제된 조달법 시행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관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 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에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조달법」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조달 규정」제16조를 통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을 두어 정부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부분의 입찰 가격 혜택을 부여하던 일명 ‘Buy Thai’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조달법」에서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외국산 또는 자국산 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처가 자국산 구매를 우선시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태국표준공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득한 제품일 경우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16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 압력을 받아왔으나, 2017년 12월 USTR은 11년 만에 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 했다. 과거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는 대 미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태국에 있어 특허관세적용 문제와 함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캠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모조품 파괴행사,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11월 7일 발효했으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2019년 4월 28일 발효 되었다. 태국은 현재 6개 국제기구 및 조약⁸⁷⁾에 가입되어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선등록

87)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마드리드 협정(Madrid Protocol),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다.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규제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쟁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져 가격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19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4건은 조사

종료, 1건은 조사 중에 있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8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10월 기준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5건 모두가 철강금속제품(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에 대한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아연도금강판 및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율 부과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5년간 연장(CIF의 6.31~22.55%) 되었으나, 2019년 1월 10일부로 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는 종료되었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19년 10월 17일부로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HS 7210.70, 7212.40, 7225.99, 7226.99)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태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였고, 이 중 1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 중이며, 4건은 조사 종료되었다. 현재 발동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한 건으로 2014년 6월 7일부터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발효하였으며,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3년 연장 조치(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00%, 2년차 20.87%, 3년차 20.74%)가 2017년 6월 6일 발효되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프가드 규제가 3년 동안 발효된 후 다시 3년 동안 연장되고 있어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전자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분야 115개 품목(2019년 10월 기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⁸⁸⁾

강제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샘플 테스트, 현지 공장 검사(해외 공장의 경우 3년에 1회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절차의 실제 소요기간이 기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인증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태국에서 시행한 무역상 기술장벽(TBT)은 1,098건으로 전체 비관세조치(NTMs)의 33.3%에 해당한다.

서비스·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88) 강제인증 품목조치는 TISI의 홈페이지 (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 참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이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개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국내무역,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며(「외국인사업법」 제10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인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인도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이후 양국의 교역은 크게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연간 214.9억 달러(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56.1억 달러와 58.8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97.2억에 달한다. 최근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스마트폰 및 자동차 생산 공장 등 제조업 공장 증설 그리고 인도 인프라 정비 등에 따른 철강·일반기계, 반도체 부품, 석유화학 등 부품 소재 수출 호조로 인해 향후 대인도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4.2%), 반도체(10.0%), 합성수지(8.3%), 자동차부품(7.0%), 석유제품(4.3%)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21.3%), 알루미늄(13.8%), 정밀화학원료(5.0%), 농약·의약품(4.6%), 합금철선·고철(4.5%) 등이다.

한·인도 투자관계를 보면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9년 9월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이 5.9억 달러로 미미한 편이며, 반대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68~2019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62.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누적금액은 26.1억 달러이며, 특히 2018년에는 약 11억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투자업종은 대부분 제조업(83.5%)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건설업(5.2%), 도매·소매업(4.5%)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도는 RCEP 협상에 참여해왔으나 2019년 11월 이루어진 협정문 타결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전매, 제한품목의 지정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며,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을 포함하고,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6월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407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량은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EASY DOING BUSINESS' 및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충실한 이행 및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 구축을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의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하고 있다. 2016년 AEO 제도 도입, 2017년 DPD시스템 도입, SWIFT도입, E-Sanchit 도입, 2018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수출입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공인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품 및 정보의 안전을 강화, 테러예방, 위험물품 등의 거래를 차단하고, AEO 인증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양자 관세당국간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인도 관세당국간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상호인정 통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도 수입검사 비율을 이전 40%에서 5%까지 낮추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는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규제기관 서류 및 인증서를 세관 단일 창구로 온라인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Single Window 시스템과 유사하나, 현재 세관전산망에 연계된 기관은 6개(Food Safety and Security, Animal Quarantine, Plant Quarantine, Drug Controller, Textile Committee등)로 한정되어 있다. E-Sanchit은 Paperless통관을 위해 통관 관련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IGES)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paperless 제도와 유사하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 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무역업자의 수출입면허 취득 및 통합간접세 등록

인도의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도는 중소·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물류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GST는 과거의 여러 간접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간접세 제도이다. 품목별로 0~28%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GST 납부증빙을 위한 운송서류인 E-Way Bill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등록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소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무역규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6월 기준 313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세계에서 미국(402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⁸⁹⁾

89) <http://i-tip.wto.org/goods/Forms/MemberView.aspx?data=default> 참고.

2019년 6월말 기준 인도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27건으로, 반덤핑 26건(조치 중 21건, 조사 중 5건), 세이프가드 1건⁹⁰⁾이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11건, 철강·금속 7건, 플라스틱·고무 3건, 섬유·의류 3건, 전자전기 1건, 기계 1건, 기타 1건이 해당된다.

인도는 한국산 화학 및 플라스틱·고무 제품에 대해 총 14건(스타이렌-뷰타디엔 고무, 과산화수소, 에틸헥사놀, 페놀, 질산나트륨 등)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산 화학 및 플라스틱·고무 제품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조치가 매우 많이 취해지고 있는 바, 인도로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에 열연코일과 열연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6년 들어서는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열연후판 및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2019년 6월 기준 총 1건의 한국산 제품 관련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90) 2019년 상반기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코트라)

있다. 2017년 12월 19일 한국산 태양광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8년 7월 16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25%, 2년차 최초 6개월 20%, 2년차 잔여 6개월 15%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반면, 2016년 11월 23일부터 2년 6개월간 적용되었던 열연후판(코일제외)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2019년 6월 22일 종료되었다.

▶ 인도의 대한민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현황

상품명	최종판정일	조치이후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열연후판	2016.11.23	10%	8%	6%
태양광셀·모듈	2018.7.16	25%	최초6개월 20% 잔여6개월 15%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 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체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체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을 유예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기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가 2차 전지의 IECE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⁹¹⁾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재인상한 상태이다.

의료기기 규칙 제정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the Medical Device Rules, 2017)이 제정되면서 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의료기기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인도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며, 산하의 중앙의약품통제기구(CDSCD)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91)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한다.

기타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BIS 또는 AERB(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가 공증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수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투자 장벽

세금 관련 규제

인도는 법인세율, 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법인세율은 자국기업 30%, 외국기업 40%로 차별적이며, 소득세율은 30.9%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2019년 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자국기업의 법인세를 22%로 인하, 신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또한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HTPs: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및 수출가공구역(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EZ) 입주업체 등이 있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 서비스업 규제

2016년 11월 초 기준 46개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 등 세 개의 은행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일부 대형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는 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 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푸네, 하이데라바드, 암다바드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2016년 하반기에는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은 뉴델리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KEB 하나은행은 2015년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데 이어, 2019년 4월 그루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KB 국민은행도 2019년 2월 구르가온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농협, 수출입은행, 부산은행은 구르가온, 뉴델리, 뭄바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OS: wholly owned subsidiary)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도중앙은행(RBI)은 국내 금융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해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복권, 도박, 전통 소매금융, 부동산 개발, 담배 및 담배 대용품, 원자력에너지, 철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개방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2014년 모디정부 수립 이후 제조업 부흥책인 Made in India 캠페인 전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FDI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인도 산업정책진흥부(DII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발표에 따르면 FDI를 위해 필요한 승인절차 중 정부승인이 필요한 FDI가 크게 축소되었다. 외국인이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인도 정부는 방산·유통 등 민감한 산업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외한 산업은 중앙

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하는 자동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2017년 인도 정부는 FIPB를 폐지하고 정부승인을 각 해당산업의 주관 부처에 맡김에 따라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 인도정부는 국방, 방송, 출판, 민간항공, 위성, 통신, 민간경비 서비스, 유통, 금융서비스 등 11개 산업부분의 외국인투자자에 정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는 100% FDI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8월 정부는 경기부양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험중개업 100% FDI 허용,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현지조달 규정을 완화시키고,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26%까지 외국인 자본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FDI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방송콘텐츠,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지상파 방송, 인공위성, 멀티 브랜드 소매업, 공공은행 등에 대한 FDI와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하는 방위산업, 항공운송, 개인경비, 통신, 단일 브랜드 소매업, 민간은행 등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타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시행⁹²⁾

2018년 4월 5일 인도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 내의 모든 시스템 제공업체(system providers)에 대해 지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도 내에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RBI/2017-18/153)를 발표하였다.⁹³⁾ 동 조치에서 데이터 현지화 대상이 되는 자료는 메시지 또는 지불 지시의 일부로서 수집·전송·처리된 모든(full end-to-end) 거래 세부사항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동 조치에 따르면 시스템 제공업체는 6개월 이내에 데이터

92) 송영철(2018.4.30.), 「인도중앙은행, 디지털거래정보의 인도 내 저장 의무화 시행」, EMERiCs, 이슈&트렌드; 송영철(2018.10.25.),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발효」, EMERiCs, 이슈&트렌드 참고.

93)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 및 첨부 문건 (RBI/2017-18/153) 참고.

현지화 조치를 준수해야하고, 2018년 10월 15일까지 인도 준비은행에 규정의 이행을 보고해야 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동 조치에 대해 미국이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고,⁹⁴⁾ 비자, 마스터, 구글 등 기업들이 데이터 미러링 허용 등 규제 완화와 마감 기한 연장을 인도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에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⁹⁵⁾ 동 조치의 유예기간동안 총 78개 핀테크 기업 중 약 60여개 기업이 데이터 현지화를 위한 로컬 서버를 구축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⁶⁾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정부의 관련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 내에서 디지털 거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동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기전자 등 일부품목 관세인상

인도는 2019년 7월에 Make In India 실현 및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해 관세를 조정하였다. 폴리염화비닐(PVC), 바닥비닐재, 타일, 금속용구, 자동차 부품, 합성고무 등 화학·플라스틱, 철강·금속, 전자기계 등 분야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였다. 에어컨은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CCTV 15% 과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는 기존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 크게 인상하였는바, 컨버터는 기존 5%에서 10%로 인상⁹⁷⁾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이염화 에틸렌, 프로필렌 옥시드 등 제품의 관세는 면제하였다.

94)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rbi-sticks-to-october-15-deadline-for-data-localisation/articleshow/66202193.cms> 참고.

95) <https://www.livemint.com/Industry/btS8iMvShrRQOrMow5pXTP/Data-localization-Deadline-over-whats-next-for-firms.html> 참고.

96) 송영철(2018.10.25.),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발효」, EMERiCs, 이슈&트렌드 참고.

9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6183>

▶ 인도의 2019년 관세인상 조치

산업	구분	품목	HS코드	기본관세	
				전	후
식품 제조	1	캐슈넛(Cashew kernels, broken)	0801.32-10	60루피 또는 45% 중 높은 것	70%
	2	캐슈넛(Cashew kernels)	0801.32-20 0801.32-90	75루피 또는 45% 중 높은 것	70%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1	Palm stearin and other oils having 20% or more free fatty acid, Palm fatty acid distillate and other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for use in manufacture of oleochemicals and soap)	제 15류 제 2915.70 소호 3823.11-00 3823.12-00 3823.13-00 3823.19-00	0%	7.5%
	2	Poly Vinyl Chloride	제 3904호	7.5%	10%
	3	Floor cover of plastics, Wall or ceiling coverings of plastics	제 3918호	10%	15%
	4	Articles of plastic	제 3926.90 소호 제 91류 3926.90-99	10%	15%
	5	Butyl Rubber	4002.31-00	5%	10%
	6	Chlorobutyl rubber or bromobutyl rubber	4002.39-00	5%	10%
제지	1	1. Newsprint 2. Uncoated paper used for printing of newspapers 3. Lightweight coated paper used for magazines	제 48류	0%	10%
	2	Printed books (including covers for printed books) and printed manuals	4901.10-10 4901.91-00 4901.99-00	0%	5%
섬유	1	Water blocking tapes for manufacture of optical fiber cables	5603.94-00	0%	20%
세라믹	1	Ceramic roofing tiles and ceramic flags and pavings, hearth or wall tiles etc.	제 6905호 제 6907호	10%	15%

산업	구분	품목	HS코드	기본관세	
				전	후
철강 및 금속	1	Stainless steel products	제 7218호	5%	7.5%
	2	Other alloy steel	제 7224호	5%	7.5%
	3	Wire of other alloy steel (other than INVAR)	제 7229호	5%	7.5%
	4	Base metal fittings, moun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furniture, doors, staircases, windows, blinds, hinge for auto mobiles	제 8302호	10%	15%
전자 기계	1	Indoor and outdoor unit of split system air conditioner	8415.90-00	10%	20%
	2	Stone crushing (cone type) plants for the construction of roads	8474.20-10	0%	7.5%
	3	Charger/ power adapter of CCTV camera/ IP camera and DVR / NVR	제 8504.40 소호	0%	15%
	4	Loudspeaker	8518.21-00 8518.22-00	10%	15%
	5	Digital Video Recorder (DVR) and Network Video Recorder (NVR)	8521.90-90	15%	20%
	6	CCTV camera and IP camera	제 8525.80 소호	15%	20%
	7	Optical Fibres, optical fibre bundles and cables	9001.10-00	10%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	Friction material and articles thereof etc.	제 6813호	10%	15%
	2	Glass mirrors, whether or not framed, including rear-view mirrors	제 7009호	10%	15%
	3	Locks of a kind used in motor vehicles	8301.20-00	10%	15%
	4	Catalytic Converter	8421.39-20 8421.39-90	5%	10%
	5	Oil or petrol 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8421.23-00	7.5%	10%
	6	Intake air 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8421.31-00	7.5%	10%

산업	구분	품목	HS코드	기본관세	
				전	후
	7	Lighting or visual signaling equipment of a kind used in bicycles or motor vehicles	8512.10-00 8512.20-10 8512.20-20	10%	15%
	8	Vehicle Horns	8512.30-10	10%	15%
	9	Other visual or sound signalling equipment for bicycle and motor vehicle	8512.20-90 8512.30-90	7.5%	15%
	10	Parts of visual or sound signaling equipment,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of a kind used in cycles or motor vehicles	8512.90-00	7.5%	10%
	11	Windscreen wipers, defrosters and demisters, Sealed beam lamp units, Other lamps for automobiles.	8512.40-00 8539.10-00 8539.21-20 8539.29-40	10%	15%
	12	Completely Built Unit (CBU) of vehicles	제 8702호 제 8704호	25%	30%
	13	Chassis fitted with engines, for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제 8706호	10%	15%
	14	Bodies (including cabs), for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제 8707호	10%	15%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원자료: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

러시아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한·러시아 간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1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에는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6년 134억 달러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2018년 248.2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17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한국의 무역수지는 2017년 51.3억 달러 적자, 2018년 101.8억 달러 적자로 최근 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2019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9.8%), 자동차부품(15.5%), 합성수지(4.2%)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3.7%), 석유제품(20.4%), 석탄(20.2%), 천연가스(7.1%) 등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9년 9월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77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1968~2019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27.5억 달러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5.1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6.4%), 도매·소매업(30.3%), 농업·임업·어업(9.9%), 금융·보험업(9.5%) 등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FTA는 서비스·투자 FTA가 2019년 협상을 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한·EAEU FTA는 2017년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이후 미진한 상황이다.

수입 규제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지만, 제도의 도입 당시 러시아 정부는 수입차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세를 면제(단, 생산업체에게 폐차 책임의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요구)하여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외국업체의 현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 부과를 추진할 당시부터 EU는 동 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WTO에 동 법안을 제소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산업과 소비 폐기물 처리법」 24.1조항의 수정을 통해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 모두에 폐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승용차 20,000루블, 화물차 150,000루블)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책정된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러시아 정부는 2016년 2월 폐차세의 부과 범위를 농업기계, 산림기계, 건설 중장비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19일 부담금 지수를 인상하는 정부령을 발표하여 2018년 4월부터 폐차세를 평균 15% 인상하였다.

현재 폐차세는 수입산과 국내산 제품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 생산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러시아 「관세법」 제재 하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관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수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통관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제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을 지연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575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즈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난 EAEU는 유럽의 CE와 유사한 통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유라시아 5개국의 단일 인증제도 구축으로 기존 러시아의 GOST-R 등 각 국가별로 적용되던 인증은 순차적으로 EAC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45개 품목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37개의 기술규정이 시행되어 이를 기준으로 EAC 적합성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EAC 인증으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증제도인 GOST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EAEU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DB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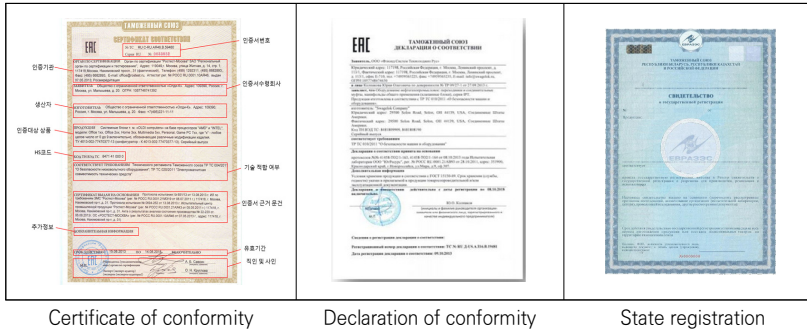
EAC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적합성 인증서(CoC)는 유라시아 현지 인증시험기관에서의 시험 및 서류 심사, 국내 제조사 공장방문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되고 DB 등록이 이루어지며, 인증서 유효기간(최대 5년) 동안 매년 1회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유럽 연합의 자기적합선언(CE DoC)과 달리, 국내 제조사가 아닌 유라시아 현지 법인(국내 제조사의 현지 지사, 법정대리인 또는 수입업체)이 적합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5개국 DB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EAC DoC는 EAEU 역외 기업의 직접 발행 및 DB 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지 유라시아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서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증의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인증 감독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며,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해당 제품의 국가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EAEU 회원국별 인증기관 현황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합계
인증기관	14	56	105	15	1,085	1,265
시험기관	27	434	637	29	1,951	2,752

자료: EEC

CU인증 샘플



정부조달

공공조달시장의 차별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법(No.94-FZ)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에서 경제개발부령(No.217)에서 정한 품목은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에 공급하는 제도를 2011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에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돼지고기, 농기계 및 장비, 종이류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경제개발부령 No.120). 이후 2014년 3월 25일 발표된 경제개발부령(No.155)에서 지정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들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차별을 만들고 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엔지니어링 제품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2017년에는 식료품 및 보안제품 등으로 정부조달 제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국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건설용 차량 및 부품 등 기계류 총 42종, 섬유류 6종, 의류 7종, 신발류 3종, 외국산 의료용 직물, 의료장비, 각종 검사키트 등 총 45종,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16종 등이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EAEU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년 7월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기계
2014년 8월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소비재
2015년 1월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기계
2015년 2월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의료
2015년 9월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IT
2017년 1월	외국산 일부 식료품 구매 제한 법령	식품
2017년 2월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국방
2017년 5월	외국산 약품 구매 제한 법령	의료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한편,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시 4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향을 WTO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2017년 6월 최초양허안을 회람하였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이 러시아의 수입 대체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호 주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한국은 호주의 7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으로 호주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대호주 상품교역은 총 303.3억 달러(수출 96.1억 달러, 수입 207.2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1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1~9월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제품(36.7%), 자동차(27.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8.9%), 철광 (22.0%), 천연가스(17.1%), 육류(6.8%), 알루미늄(3.2%) 등이다.

양국간 투자관계는 한국의 대호주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2~2019년9월 호주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0.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특히 최근 5년(2015~2019년9월) 투자금액이 21.5억 달러로 많은데, 이는 2018년 운송용기계에 17.4억 달러 대규모 투자의 영향이다. 반대로 1968~2019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50.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호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다. 최근 5년(2015~2019년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투자금액)는 총 37.7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50.1%), 금융·보험업(15.1%), 부동산업(12.8%), 운수·창고업(11.3%), 제조업(5.4%) 등이다.

한·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하여 2019년 11월 잠정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호주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의 11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40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특히, 국방부, 보건부, 환경부, 내무부, 인적서비스부 등이 주요 발주 부처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참여는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 조달 시장을 현지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등 각 부처가 정한 사전요건⁹⁸⁾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의 주정부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 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호주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한 바 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비차별, 조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호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한·호주 FTA보다 양허수준의 확대 또는 양허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98) 호주 연방부처들은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의거, 조달시장에 입찰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요건들을 만족한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⁹⁹⁾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호주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23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8개 품목(총 21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23건은 반덤핑 조사 3건(5개국), 덤핑관세부가 연장여부 조사 4건(8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9건(11개국), 면제 조사 6건(10개국)이다. 이는 2019년 1월 대비 조사 중인 품목은 9개가 감소(32건 → 23건)한 반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부과 품목은 소폭 증가(25건 → 28건) 했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8건) 중 15건(전체 대비 54%)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8월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반덤핑조치 5건(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열연구조섹션(Hot rolled structural section), 철근(Steel Reinforcing Bar), A4용지) 등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80%가 철강제품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품목 모두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호주의 보호무역 기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99)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한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많았으나 201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브라질 생산 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181.6억 달러)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양국간 교역의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며,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2018년 기준 교역액은 87.9억 달러(수출 48.8억 달러, 수입 39.1억 달러)로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1~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0.0%), 자동차부품(14.6%),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29.8%), 철광(24.2%) 등이다.

양국의 투자 관계를 살펴보면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19년9월 기준 11백만 달러로 미미한 편이다. 반면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1968~2019년9월 기준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83.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7%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5~ 2019년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투자금액)는 총 25.0억 달러이며, 주로 제조업(45.2%), 건설업(19.3%), 광업(17.3%), 운수·창고업(9.3%), 도매·소매업(5.1%)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기업의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국가와 협상 진행중인 FTA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

수입허가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품목이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연고무나 인조 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는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 상세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로 검사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음) 등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기 일반적인 통관절차 이외에 청색 채널이 있는데 동 채널은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 do Brasil)에 사전 등록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동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의 조건으로는 우선 2천만 헤알 이상의 대규모 자산 보유, 연간 무역규모 1천만 불 이상(FOB 기준) 및 디지털화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동 기업에게는 수입시 녹색 채널에 따른 자동통관이 허용된다.

DUIIMP(단일수입신고)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통관 지연 개선

브라질 통관 검사 관련 법(Decree 70,235/72)에 따르면 통관절차(자동통관) 기간은 최대 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중절차, 정보접근 애로,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에 통관 지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수입업자들은 통관 지연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통관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14년부터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신속한 수입절차를 위해 “DUIMP”(단일 수입신고/Decalaracao Unica de Importacao)라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2020년 도입 완료 목표)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수입 통관절차는 현재의 17일에서 10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브라질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또는 메르코수르 국가)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의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한국 주요 수출 품목군인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등 주요 시험항목들은 국내 기관을 통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는 브라질 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해야한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시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155개 품목을 유지하였다.¹⁰⁰⁾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100)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 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 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¹⁰¹⁾로 나뉘

101) 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2010년 Lula 정부시절부터 암염하층(pre-salt) 등 석유개발시 최대 90%까지 자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석유 및 조선 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정책은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인해 R&D 투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자국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브라질 석유 및 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6년 이후 Temer 정부에서는 동 규정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자국투자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Category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 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 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발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산하 환경위생기술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무역규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 수출품목 중 10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부품목은 PVC(염화비닐수지), 철강 2개 품목(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페라이트 자석, PVC 코팅 직물, 니트릴 고무이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은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 관세부과가 연장되었으며, PVC(염화비닐수지), 나일론사, 승용차용 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일몰재심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23건 중 17건이 2010년대, 특히 2013~2014년에 들어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7건(화학공업제품 3건, 철강금속제품 2건, 섬유제품 2건)은 무혐의 판정 등으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0건¹⁰²⁾, 2019년 0건으로 최근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양국간 교역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직원 채용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고용) 시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3명 중 1명은 외국인, 2명은 현지인). 현지 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상여금, 휴가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별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7년 노동법 개정 전 노동자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였으며,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었다.

102) 2018년 조사가 시작된 품목 3건은 모두 기한 연장임

그러나 2017년 7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급, 휴가 등 일정분야에 있어서는 노사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되는 등 노사협약의 법적지위가 높아졌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되었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캐나다

2019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9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그리고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다. 한·캐나다 간 상품무역은 2011년 최대 규모인 115.4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2~14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정체 상태를 보이다 2015년 86.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8년 115.0억 달러(수출 47.2억 달러, 수입 50.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1~9월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47.6%), 무선통신기기(8.3%), 자동차부품(4.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9.1%), 동광(7.8%), 철광(5.7%), 항공기·부품(5.6%) 등이다.

1962~2019년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3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총 15.2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58.4%), 부동산(19.7%), 식품(9.0%), 정보통신(6.4%), 섬유·직물·의류(2.8%) 등이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또는 지분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몰타,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로 인해 상당부분이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1968~2019년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127.2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에서 2.6%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5~2019년 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총 36.7억 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업종별로는 광업(56.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에 제조업(15.6%), 금융·보험업(14.1%), 부동산업(3.7%)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캐나다 간 FTA는 2014년 9월 타결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 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 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준인증(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나,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 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함유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대상제품에 대한 MEPS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국 양

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규제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대상 주요 품목은 가정용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기, 전기모터, 오일·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인 알레르겐(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 황색소(gardenia yellow) 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무역구제 조치

수입규제 절차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및 「동법 시행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국제무역재판소 규칙(CITT Rules)」 등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 CBSA는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국내 공장도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조사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all other exporters”로 분류되어 최고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된다. 덤핑 마진율의 최소허용한도(de minimis)는 2%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며, CBSA는 규제 대상 업체들에게 품목별 정상가격을 부여하고, 향후 수출시 정상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CITT 위원들(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예비판정 및 본판정

에는 3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된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ITT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①수입물량, ②가격변동, ③국내산업 피해 여부, ④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해판정 시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도 검토하며 수출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 생산 능력, 수출의존도, 다른 수출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 후, 기업별 및 품목별 정상가격을 별도로 계산해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HS 7306)
 - 가스 배관, 철골 구조 등에 사용
 - 2003년 12월: 최종 판정에서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3년 12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계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7412)
 - 열기기 및 배관, 공조, 냉동기기 등에 사용
 - 2007년 2월: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6년 2월: 재조사 결과 자료 제출 기업에는 하향 조정, 미제출 기업에는 242% 부과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6월: 연례재심 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8504)
 -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2012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4년 3월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2017년 7월: 재조사에 따른 최종 판정도 동일하게 유지
 - 2018년 5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2019년 7월: 기업요청에 의해 긴급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관세율)는 비공개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HS 7306)
 - 산업 배관 등에 사용

- 2012년 12월: 5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이듬해 수출액 크게 감소)
- 2018년 10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관(Copper Tube, HS 7411)
 - 배관, 난방, 천연가스관 등에 사용
 - 2013년 12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5년 1월: 재조사 결과 동일 유지 결정
 - 2019년 9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 HS 7280)
 - 선박, 교량, 컨테이너 제조 등에 사용
 - 2014년 5월: 최고 59.7%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9년 5월: 일몰재심 개시로 최종 판정 결과는 2020년 3월 발표 예정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HS 7213/14/15/27)
 -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시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사용
 - 2015년 1월: 최고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7년 9월: 재심결과 한국, 중국, 터키 등 3개국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2019년 12월: 일몰재심 개시로 최종 판정 결과는 2020년 5월 발표 예정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HS 7304/06)
 - 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
 - 2015년 4월: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 2019년 9월: 연례재심 개시로 최종 판정결과는 2020년 3월 예정

- 철구조 부분품(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HS 7216/7301/7308/7326/8421/8428)
 - 오일 및 가스 추출, 수송, 가공 등에 사용
 - 2017년 5월: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 7216/7301/7308)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송유관,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
 - 2017년 9월: 반덤핑 예비판정(4.7~107.2%의 잠정관세를 적용)
 - 2017년 12월: 최종 긍정판정으로 한국기업에 4.1%~88.1% 반덤핑 관세 부과
- 냉연강재(Cold-rolled Steel, HS 7209, 7225)
 -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2018년 5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 2018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53%의 반덤핑,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 부과
- 내부식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HS 7210, 7212, 7226)
 -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널리 사용
 - 2018년 7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개시
 -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9%~40% 반덤핑 관세 부과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약 451억 원)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투자자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19년 C\$ 10억 4,500만(약 9,427억 원)으로 2018년(C\$ 9억) 대비 증액되었으며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19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4억 1,600만(약 3,753억 원)이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2019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 2019년 12월

◆ 발 행 | 2019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